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1.10 (제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제6호

본지는 연 2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지입니다.

발행 2021년 10월 8일
발행인 김진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편집인 박세현(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장)
편집위원장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태중(충남대학교)
 성형권(영남대학교)
 이성춘(송원대학교)
 장광열(국방대학교)
 최규상(대전대학교)
 최운철(상명대학교)
편집간사 문근형(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발행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전화 02-499-0201
팩스 02-417-5527
이메일 korvass0201@naver.com

ISSN 2672-040X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재향군인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논문내용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http://www.korva.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미국의 반중전선 확장과 한국의 안보 전략 방향
-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
| 김기호 | 1

- ❖ 보훈단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 설문조사 기법을 통한 연구 -
| 문근형 | 41

- ❖ COVID-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 박상중 | 73

- ❖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신현영 외 | 97

- ❖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본 국가안보 위기시의 군 위기
커뮤니케이션
| 윤원식 | 129

미국의 반중전선 확장과 한국의 안보 전략 방향

-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

김기호 *

- I. 서 론
- II. 인도-태평양전략의 태동과 반중(反中)전선 확장 분석
- III.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평가
- IV.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현안에 대한 선택 방향
- V. 결 론

논문요약

본 논문은 트럼프 시대에 이어 바이든 시대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중전선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기된 안보현안에 대한 안보전략 선택방향을 제시하였다.

트럼프 시대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국가들을 쿼드 등 대중연합체로 묶는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을 추진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과 연대”의 기치 아래 유럽과 NATO까지 반중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전략 및 인도-태평양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이며, 의회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력증강을 추동하면서 군과 정부를 견인하여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음에도 한국이 북핵을 독자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 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안보상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비할 수 있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안보현안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작권의 무리한 조기 전환을 지양하고 현 유엔사/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둘째, 즉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하고 셋째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위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주제어 : 안보다이아몬드 구상,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동맹, 대중국전략, 안보전략 방향, 전시작전권

I. 서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된 미국의 반중(反中)전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되어 날로 확장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전략의 핵심개념을 ‘민주주의’와 ‘동맹 및 연대’에 두면서¹⁾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국들을 연대하여 반중전선을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반중전선은 안보와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과학기술과 코로나-19의 기원 등 보건의료 분야와 권위주의 대(對)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다. 특히 반중전선의 핵심 전장이 ‘인도-태평양(Indo-Pacific)’지역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 등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대서양 국가들과 NATO까지 인도-태평양으로 끌어들이면서 반중전선을 확장시키고 있다.

2021년 초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은 트럼프 전 대통령 만큼 거칠지 않더라도 내실있게 전략적으로 ‘범대서양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을 추진하면서 유럽열강까지 인도-태평양으로 끌어들이고 있다.²⁾ 이미 미국은 지난 4월 프랑스를 주도역할로 참여시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 4개국’과 함께 벵골만 해상에서 대중견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G7정상회의를 통해 G7국가의 반중전선 참여와 NATO 전략개념에 대중견제를 포함시켰다. 그 일환으로 영국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가 프랑스에 뒤질세라 지난 7월말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도 지난 8월 2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해 출항했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오간스키(A.F.K. Organski)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³⁾을 주장했다. 세력전이 이론은 지배국과 불만족 도전국 사이에 대

1) President Joseph R. Biden Jr.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SSG)*(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NSC, March 2021), pp. 7-8.

2) Nicholas Burns and 15 others, *Stronger Together : A Strategy to Revitalize Transatlantic Power*(Harvard Kennedy School, December, 2020), pp. 2-4(Executive Summary)

3) A.F.K. Organski, *World Politics*(The University of Michigan, Jan, 1968),

락 세력(power)이 균등해지는 상황이나, 또는 세력(power)이 등가가 되는 상황이 되면 대단히 높은 전쟁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⁴⁾ 특히 불만족 도전국이 지배국과의 '가치(Value)와 이익(Interest)'이 다를 때 패권이 순조롭게 전이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패권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미국과 일본 및 유럽국가들까지 재인식하면서 최근 국제정치에서의 두드러진 변화의 특징은 국가간 협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쇠퇴하고 자국의 힘(Power)을 강조하는 현실주의(Realism)에 바탕을 둔 민족 및 국가주의(Nationalism)가 선명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다.⁵⁾ 이러한 현실 및 국가주의의 움직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외친 트럼프에 이어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를 주창하는 바이든에 의해 더욱 확장된 반중전선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 미중갈등은 무역통상과 안보문제 뿐만아니라 코로나-19의 기원문제 등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고 근원적으로 ‘권위주의 대(對)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데올로기 분야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동맹’에 의한 반중전선 구상이 본격화할수록 동맹국들은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하라는 압박에 더욱 직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가장 어려운 난제이다. 한국의 선택은 향후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국가의 대전략적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일각에서는 안보는 미국, 그러나 경제는 중국이라는 추상적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⁶⁾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추세는 한국에게 언제까지나 위협한

Preface.

4)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제3판(서울: 법문사, 2013), pp. 260-263.

5) John J. Mearsheimer,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8), Preface, pp. 7 - 11. 김기호, “文, ‘대환상’ 못 깨면 안보 위태로워져 : 비핵화 협상 2년 ‘거짓 평화’가 남긴 것,” 『新東亞』, 2020년 2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59181/1> (검색일: 2021. 08. 07.)

6) 우정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맞는 말인가,” 『MK 매일경제』 (2020년 9

줄타기를 하면서 모호하게 서 있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양상이다. 더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억제 및 방위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의 핵위협에 위협에 직면해 있다.⁷⁾ 또한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 또는 일본 등 주변국과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면서 잠재적 안보위협하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인도태평양전략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확장시키는 반중전선을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몇가지 안보전략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있는 가시화된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서와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과 반중전선 확대 현상 분석을 통해 미국의 반중전선확대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한국 안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선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정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때 발간된 '잠정국가안보보전략지침서(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SSG)'와 우수 연구기관의 전략보고서와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발간된 미국의 대중전략문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반중전선 확장 현상을 살펴본다. 특히 반중전선 확장과 인도-태평양전략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 의회-정부-군 3각편대의 움직임과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동맹의 동향도 추적해 본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공식문서와 연구보고서, 세미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7월 7일):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920166/>(검색일: 2020.09.10.)

7) 물론 남과 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비핵회담 패착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에 의한 대남 비방의 증가와 함께 마침내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무시행위와 대북협력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보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불안한 군사합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II. 인도-태평양전략의 태동과 반중(反中)전선 확장 분석

1. 인도-태평양전략의 태동: 아베-트럼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미국의 반중(反中)전선의 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굳어진 배경에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일본 총리의 집요함이 있다.⁸⁾ 일본은 2011년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인 2012년 9월 20일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 해군 호위함 2척이 나타났다. 이른바 센카쿠 열도 분쟁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충격은 배가 되고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미래의 일본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인식한 일본으로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해졌다. 때마침 2011년에 집권한 아베는⁹⁾ 2012년 12월에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글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진주목걸이’에 대항하는 반중전선을 제안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가 급속히 베이징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며 “구소련의 오호츠크해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아베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는 제목의 강연에서¹⁰⁾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의 증진자이며 글로벌 공공재의 수호자이자 미국·한국·호주 등 동질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연설이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첫 사례에 해당된다. 아베의 구상은 중국의 진주목걸이를 봉쇄할

8) 조은일,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2호 2020년(여름) 통권 109호, pp. 73-103

9) Brad Glosserman, *Peack Japan: The End of Great Ambition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April, 2019.; 그 당시 일본은 끝없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재정적자 등 제자리걸음만 하다 2009년 자민당 장기 집권이 무너졌다. 그러나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도 지지부진 했고 결국 3년 만에 다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된다.

10) 임상훈(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대중국 포위망 퀴드, 투키디데스의 교훈), “합정에 빠진 한국, 미국과 일본의 노립수,” 『ohmynews』 (2021.03.19.);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28345(검색일: 2021.08.09)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엮는 ‘다이아몬드’ 구상이었다. 문제는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아베의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에 최초부터 한국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이아몬드 구상은 처음부터 아베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아베는 다이아몬드 구상 중 가장 소극적인 인도를 집요하게 설득해서 끌어들이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이 상존하였고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의해 봉쇄되었기에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를 간파한 아베는 2015년 12월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일·인도 비전 2025’를 발표했다. 바로 이 발표문의 부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동’이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위협에 맞설 장기 전략으로 동쪽으로는 전통적 맹방인 미국을 견인하고, 서쪽으로는 인도와 손을 잡음으로써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대중국 방어 시스템을 구상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림 1>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



<출처> 『한국일보』(2019.09.01)“물러나는 아베의 안보 구상, 시진핑 발목 잡을까”¹¹⁾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3111530000680>

사실 일본의 적극적 구애를 받은 인도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과 해결되지 않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경험이 있다. 심지어 당시에 비하면 지금 양측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벌어졌다. 게다가 2014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경제 협력체로, 인도는 이 계획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위험이 커졌다. 심지어 인도양의 지배권을 눈 뜨고 앉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마침내 아베는 2016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다.¹²⁾이어서 2018년 12월 일본 외무성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외교정책을 공식화했다.¹³⁾ 그것은 곧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이 집단 안보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선으로 연결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블록에서 이름을 따왔다. 아베 정부는 2010년대 초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에 따라 미국, 호주, 인도 등 동질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전략을 추구했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가 가능하도록 인도양으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여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ASEAN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을 확대했다. 호주 Lowy 연구소(Lowy Institute)의 국제안보 전문가인 메드카프(Mr. Rory Medcalf)의 주장처럼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해양공간의 확장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생기를 불어넣는 원칙(animating principle)’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¹⁴⁾

12) 그해 8월 케냐에서 열린 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해양 공간을 글로벌 공공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발표한다.

13)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외교정책란에 ‘외교청서’, ‘주요한 외교일정’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향한 일본의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gaiko/index.html>.(검색일 : 2021.0808)

14) Rory Medcalf, “Indo-Pacific Visions: Giving Solidarity a Chance,” *Asia Policy*, volume 14, number 3 (July 2019), pp. 79-95.; “The Indo-Pacific is the animating principle for Japan's strategic”.

인도-태평양정책을 추진하던 아베에게 트럼프의 등장은 큰 도전이자 기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제한적 외교를 구사하면서 고립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아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견인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해외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는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수행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한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해 아시아에서 미군 역할의 상당 부분을 맡기고 싶어 했다.¹⁵⁾

어쨌든 아베의 적극적 인도-태평양 역할론은 돈에 의해 정책을 판단하는 트럼프에게는 호재였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비(戰費)를 과다 소모한 미국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아시아 진출을 일본이 길을 닦고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 주니 미국으로서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다. 일본과의 동맹 관계는 더 굳건해지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린 셈이다.

트럼프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도-태평양전략을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취임 첫해인 2017년도에 국가안보전략의 최상위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¹⁶⁾를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는 2018년에 방위전략을 모색한 국가방위전략서(NDS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했다.¹⁷⁾ 그리고 대중국연례보고서와 마침내 인도-태평양전략서를 완성하였다. 2018년 5월 트럼프 정부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해군 사령부를 기존의 태평양사령부(TACOM)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로 개칭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령부의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개칭의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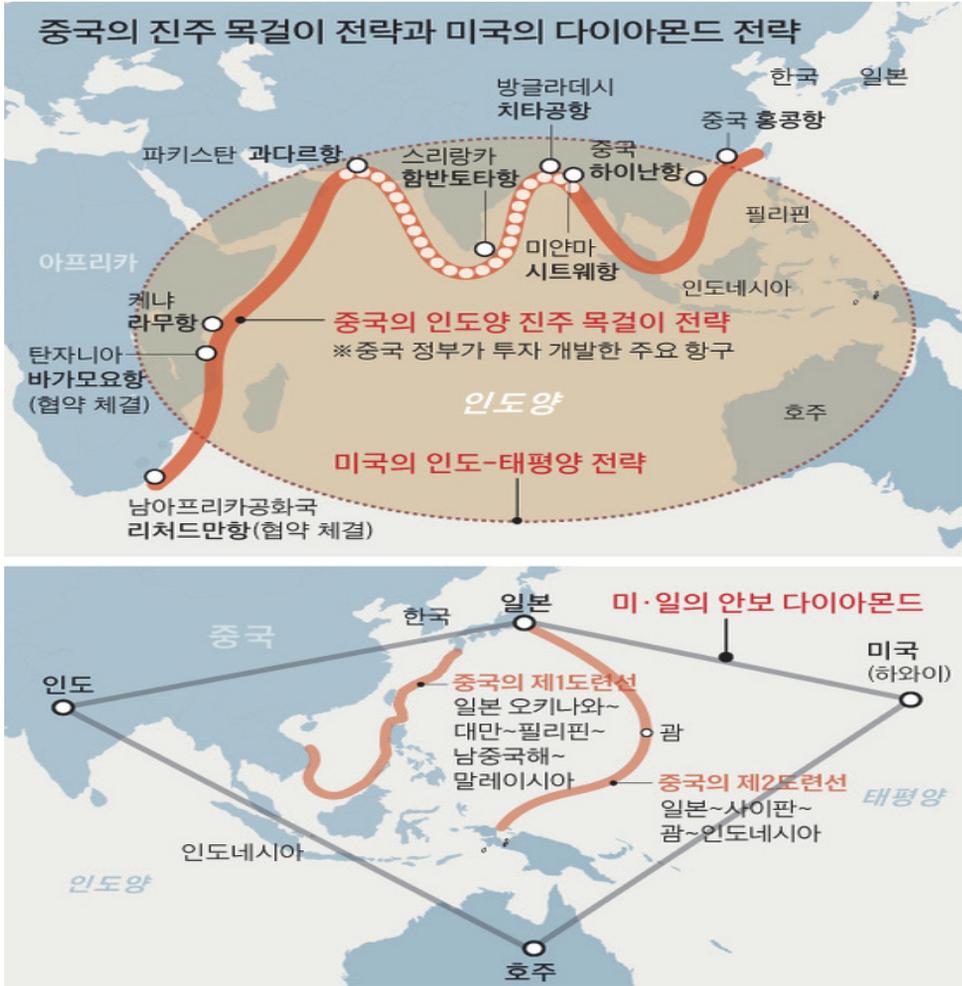
15)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라고 일본에 요구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틈만 나면 일본을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16)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te House, Washington D.C., Dec. 2017)

17)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Pentagon, Washington D.C., Jan. 2018)

는 제3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그림 2〉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미-일의 다이아몬드 전략



〈출처〉 『중앙일보』(2017.12.22.),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2. 바이든의 반중전선 확장: 민주주의 동맹과 연대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에서 찾으면서 반중전선을 유럽의 국가들까지 가세시켜 확대

하고 있다.¹⁸⁾ 다만 트럼프와 차이나는 용어의 선택과 전략을 확장하는 중국견제라는 본질은 동일선상이다.

미국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들을 규합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전략만은 트럼프의 대중봉쇄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연대하는 것이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반중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NATO까지 합세한 범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으로 확대시키고 있다.¹⁹⁾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미국에서 범대서양 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가 증가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9년 12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연구보고서 ‘동반 강화: 범 대서양 전력 활성화 전략(Stronger Together : A Strategy to Revitalize Transatlantic Power)’는 대표적이다. 바이든의 핵심 참모인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으며, 8가지 분야를 분석했으나 핵심은 중국이다.²⁰⁾ 동 보고서는 미국이 당면할 도전에 대비해서 ① 민주주의를 재활성해서 동맹과의 신뢰를 재건하고, ②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도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합동전략을 수행하며, ③ 전 세계가 자유와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을 혁신시키는

18) 바이든은 아베-트럼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대신 ‘안보와 번영의 인도·태평양(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을 선호하고 있다.

19)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연구보고서 '동반 강화: 범 대서양 전력 활성화 전략(Stronger Together : A Strategy to Revitalize Transatlantic Power)'이 대표적이는데, 바이든의 핵심참모인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보고서를 주도했다.

20) Nicholas Burns 외 15, Stronger Together : A Strategy to Revitalize Transatlantic Power, HARVARD Kennedy School, December 2020.; ① 경제와 무역(Economic and Trade), ② 안보와 방위(Security and Defense), ③ 중국(China), ④ 러시아(Russia) 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Energy Policy and Climate Change), ⑥ 민주주의(Democracy), ⑦ 기술(Technology) ⑧ 중동과 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것의 3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연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미(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이미 시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작금의 세계질서는 미국의 단극체제에 위한 세계질서 운영은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기에 과거에 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훨씬 심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정부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시라이트 연구원은 “미국이 일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등 강력한 동맹들이 있기에 역내 문제에 대해 미국의 해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With) 협력해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1년 2월 3일 미국 카네기 재단이 일본 국제관계포럼(JFIR)과 공동 주최한 ‘중국 다루기’ 웨비나에서 시라이트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중국의 약탈적인 관행에 대항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중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들에 동맹들이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미국이 강하게 원하고 기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²¹⁾

특히 중국의 인권 유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과 타이완과 홍콩에 대한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 미국이 공감을 갖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집단으로 중국을 성토했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은 이와 같은 ‘공동행동과 연대’가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여 동맹국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동에 맞서는 것이 미-중 경쟁에서 점수를 따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동맹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담론들을 종합해보면 바이든 시대 민주주의 동맹은 기존의 지정학적 연합체인 쿼드, 선진국 경제 연합체인 G7에 더해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술 연합체인 T12, 주요 민주주의 10개국 (D10) 결성이 논의되는 등으로 반중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21) 『VoA』, 2021.2.4., ; 미 전문가 “바이든 대중전략 핵심은 ‘민주주의’, ‘동맹과 연대’”

Ⅲ.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평가

1. 미국의 대중국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전략(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²²⁾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미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2017(NSS)’과 ‘국가방위전략2018(NDS 2018)’을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중국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집약한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약 40년 동안 취해왔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전제하면서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개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중국이 더 개방된 사회가 되면 시민 중심적인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에 기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질서를 착취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이해와 이데올로기에 일치하도록 국제질서를 개조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의 국익이 중대하게 훼손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미국에 경제적, 가치적, 안보적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WTO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보호·육성했다. 중국은 국제가격을 왜곡해 대규모의 산업생산과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산업기밀을 ‘훔치며’ 환경오염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경제관행을 저질렀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를 통해 “주요 기술

22)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 Washington D.C.2020.05.21.);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

분야에서 중국의 공업규격 사용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비(非)중국 회사들을 희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회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중국은 황해와 중국 동남해, 대만 해협,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7월 중국 국방부 장관은 “일대일로는 태평양 연안의 섬들과 캐리비안해와 같은 해외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팽창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국영기업과 사기업, 대학과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다른 외국 회사들은 부지불식간에 중요한 군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중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법 등은 화웨이나 ZTE와 같은 기업들에게 중국의 안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강요하며 이로 인해 중국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외국 국가들과 기업들은 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손상시키는 중국의 프로파간다와 거짓된 서술에 계속해서 도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당면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의 보호 ▲ 미국의 번영 증진 ▲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대해 “사실상 신냉전의 선포”라고 지적한다.²³⁾ 윌리스 그렉슨 전(前)미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23) 양연희,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펜앤드마이크』 (2020년 7월 8일)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0=33330>(검색일:2020.09.11.)

는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 여부는 한국의 선택에 달렸지만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의 ‘약탈적 경제’가 야기하는 결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서해 부근 군사활동 증가로 인한 한국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CCP)’로 지칭됐고, 중국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표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통령’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표기됐다. 보고서는 중국인들과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분리·구별해서 표현했다.²⁴⁾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도 말에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를 발표하였다. NSS 2017 에서 미국은 중국을 확실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2018년에 공표한 국가방위전략서(NDS 2018)에는 중국에 필적한 전략개념과 전력증강 구상을 발표했다. 마침내 2019년 6월 1일, 미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공개하였다.²⁵⁾ 는 담고 있다. 의회의 요구와 방침에 의해 미 행정부는 전략문서를 기획체계에 맞게 주기적으로 발간해야 하나 역대정부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2년만에 구체화된 국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방안을 문서로 표현했다. 이른바 무역전쟁(Trade

24) “미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오래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들과 관여가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 및 대응을 천명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구별하듯 한국도 북한 공산당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여 상대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5)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 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Pentagon, Washington D.C., June. 2019)’이란 제목의 전략문서이다.

War)으로 평가되는 ‘美-中間 경제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 핵심은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 Policy)’을 안보정책의 출발점으로 하여 美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팽창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잠재적 경쟁국들의 세력확장을 봉쇄하는 것이다. 눈엣가시처럼 미국에 안보위협을 가하는 불량국가들을 압박과 회유로 굴복시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그 전장(戰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하였고, 주요 경쟁상대로 중국을 지목하였으며, 북한 핵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적시하였다.²⁶⁾

이어서 2020년 5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명확하게 기술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가는 20년 넘게 축적한 중국 관련 군사 및 안보분야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서문에서 ‘자유 對 억압’의 지정학적 대칭 구도로 표현되는 ‘국가 간 전략적 경쟁(Inter-States Strategic Competition)’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된 위협요소로 들면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 현대화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이루어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의 국제질서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국이 ‘신속하게 지엽적인 공세적 군사행동을 하여, 멀리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대응하기 전에, 손쉽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성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Prepared and Combat Credible Military Forces)’을 전진배치하고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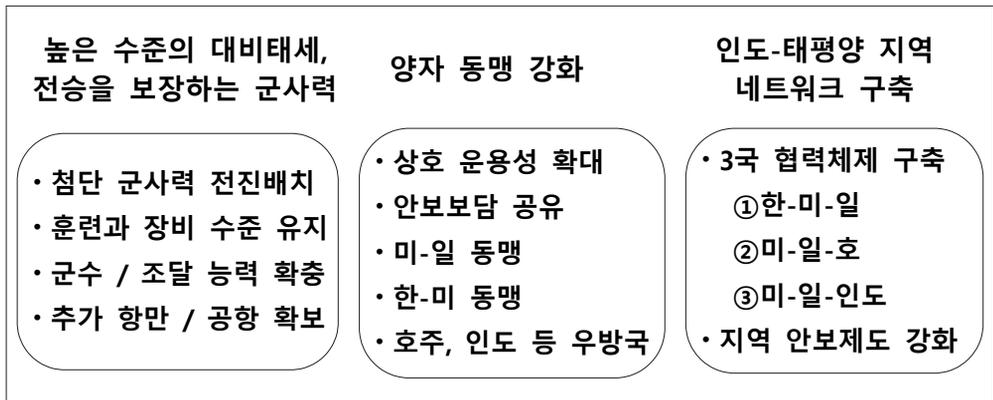
26) Hillary Clinton,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in *Foreign Policy* ([https:// foreign policy.com/2011/10/11/americas-pacific-century/](https://foreignpolicy.com/2011/10/11/americas-pacific-century/)).

태세를 위해 훈련과 장비의 수준유지, 지속적인 군수/조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영역 전투 수행능력 (Multi-Domain Operations Capabilities; MDOC)을 새로운 군사력 운용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지역 내(內)에 첨단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와 여러 종류의 미사일 추가 구매, 해상·해저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구매 및 무인 전투함 개발,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효과적인 군사동맹 유지를 위한 두 가지 기조로써 ‘상호운용성의 확대’와 ‘안보부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²⁷⁾협력과 상호호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의 위협에 공평한 분량의 책임의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안보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자안보 협력체제 간 다양한 훈련과 정보공유, 공동 군사능력 구축 등의 활동으로 다수의 양자 동맹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상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출처: 안기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Issue BRIEF』, 2019-26 (아산정책연구원)

27)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4.2. Line of Effort 2 : Partnerships,” in 4. Sustaining U.S. Influence to Achieve Regional Objectives, p. 2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요약하면 사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 개의 삼자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동북아·태평양·인도양의 세 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²⁸⁾ 동시에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여,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 분담 노력과 각 국이 제공하는 군사력의 규모를 증가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요충지역으로 평가하는 ‘인도의 서부 해안에서 미국의 서부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함에 있어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국 및 지역 내 국가들을 엮어 함께 수행하겠다’는 美 국방부의 군사력 운용의 의도를 표명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기존에 발간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위 안보전략문서들과 관련해보면 맥락이 상위문서들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명시된 것을 찾아보면 우선,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이 부각 되었다는 부분과 동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역할분담 및 공동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며 관련된 전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이다.²⁹⁾

IV.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현안의 선택 방향

1.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배제된 한국

28)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포괄했다. 즉 일본을 하나의 주요 상대로 하는 삼국간 협력체제를 제시하면서, ① 북한의 핵 위협 등 동북아 지역을 위한 ‘한·미·일 삼국간 협력체제’, ② 오세아니아와 태평양 지역을 위한 ‘호주·미·일 삼국간 협력체제’, ③ 인도양 지역을 위한 ‘인도·미·일 삼국간 협력체제’등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29) 인도-태평양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왜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한일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비밀군사보호협정(GISOMIA)을 중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된다.

아베가 주도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태생시킬 때부터 기실 한국은 배제되어 있었다. 아베의 숨은 정치적 계산과 의도 등이 깔려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일감정도 이를 부채질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 및 친중노선이 미국의 의심과 일본의 사주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인도-태평양이란 이름만 없었을 뿐 이미 미국은 지역안보에서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책임분담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역 국가의 범위와 협력의 영역이 보다 다양해졌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역 국가들은 동맹, 전략적 파트너, 지역(남아시아·동남아·남태평양)의 파트너, 역외 파트너(영국·프랑스·캐나다 등)로 구분된다. 여기에 3자 협력 (한미일·미일호·미인일 등), 아세안(ASEAN),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등이 다자협력 이름으로 추가된다.³⁰⁾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민주주의 동맹과 연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방부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주요 동맹국 중 일본·호주는 명확하게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 역할 규정이 되어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으로,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 관한 언급에서도 인도-태평양 단어들만 쓰인다.

반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국과 전략적 협력의 대부분은 사실상 북한 문제와 한반도에 국한된다. 한국을 다루는 약 2쪽 분량에 인도-태평양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 중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인

30) 이재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평가: 미국의 위협인식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6.20.)

도-태평양 큰 그림에서 미국 국방부가 인식하는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 하면서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거대한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연합체로 묶어 중국을 봉쇄하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것은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 ‘쿼드(Quad·4각 안보협의체)’, ‘네트워크화된 인도태평양’ 등 우리에게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대두되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NATO’를 출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³¹⁾ 2020년 8월,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이행수단으로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의 구성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³²⁾ 에스퍼 장관은 미군이 자·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우세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군은 중국군의 작전 기동과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 동맹국, 파트너십,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유해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방부는 다영역 전장에서 적용할 ‘새로운 21세기 합동전투개념’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교리화해 ‘대중국 연합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구상하는 ‘대중국 연합체’가 단순히 경제·통상 등의 분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군사작전까지 염두에 둔 유럽의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 차원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도 ‘네트워크화한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트럼프의 안보다이아몬드 구상과 그 작품인 쿼드에도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 D10에도 한국은 초대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해 미국은 쿼드를 가지고 한국을 시험하고 있고, 일본은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한국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31) 김귀근, “[김귀근의 병영특특] ‘인도태평양판 나토’ 뜨나...미, 대중연합체

구상:

중국 봉쇄 ‘동맹 줄세우기’ 본격화...”미국·중국 중 선택하라” 압박 가중”

『연합뉴스』 (20 20년 9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120100504> (검색일 :2020.09. 10.)

32) 에스퍼 장관은 2020년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의 싱크탱크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력 강화 계획과 전작권 전환 문제

1) 미국 의회의 ‘태평양 억제 구상’ 드라이브: 법안과 예산 뒷받침

미국 의회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 대폭 강화해 중국이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2020년 5월부터 미 상원은 군사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태평양 억제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려는 구상을 기고문을 게재를 시작으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다.³³⁾ 이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미국의 그런 능력이 지금 위협에 처했으며, 더욱이 동맹국들 또한 미국을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는 인식하에 우선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인도-태평양의 미군 전력을 강화할 때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적 역지력은 상대가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 전력 차이에서 나오는데, 최근 중국이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이런 역지력의 토대가 무너졌다”면서 “이는 초당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미군이 인도-태평양 어디서든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떤 핵심역량이 미흡한가를 파악해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의 군수체계에는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역미사일방어(TMD), 원정용 비행장, 항만 기반시설, 연료·군수품 물류시설 관련 투자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군의 미래 대비태세를 만드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도 의원들은 주장했다. 인도-태평양 내 미군 역지력이 줄어들면 동맹국들은 미국

33) SEN. Jim Inhofe and SEN. Jack Reed,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War On The Rocks*(2020년 5월 28일);

<https://warontherocks.com/2020/05/the-pacific-deterrence-initiative-peace-through-strength-in-the-indo-pacific/>(검색일:2020.09.11.); 전경웅, “美, 인도-태평양 전력 강화 ‘태평양 억제 구상’ 공개, 중국 군사력 강화에 맞서… 미군 전력 확충, 군수물류체계 개선, 재정 투입 강조,” 『New Daily』 (2020년 5월 29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9/2020052900131.html>(검색일:2020.09.11.)

을 계속 믿어도 될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인도-태평양에 미군 전투병력이 증가하면 중국이 분쟁 초기에 승기를 잡기 어렵게 되고, 군수물자 물류체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미군 전력의 증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지상기반의 장거리 타격전력(미사일)은 회복과 생존이 가능한 미군 전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 전력과 시설을 인도-태평양 곳곳에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고, 더욱 향상된 미사일 요격체계를 기지마다 배치한다면 중국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미군에 빠르고, 손쉽고, 저렴하게 승리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³⁴⁾

실제로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³⁵⁾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Indo-Pacific Reassurance Initiative, IPRS)’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 조치로 보인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

34) 의원들은 “오늘은 아니다. 군사력으로 (미군을) 이길 수 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태평양 억지 구상은 (중국 압박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시험하기 좋은 날은 없다는 것을 적이 확실히 알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대중국 압박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태평양 억지 구상’을 위한 예산은 올해 제정할 예정인 2021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때부터 반영했다.

35) 이조은,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 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VOA(2020년 7월 3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gress-indopacific-deterrence>(검색일:2020.09.11.)

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역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³⁶⁾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① 먼저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②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 군사훈련 강화, 유지가 목표다. ③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④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⑤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다.

2) 인도태평양사의 강화와 전작권 조기 전환시 파생 문제

미국은 2018년 5월 31일, ‘미국태평양사령부(USPACOM :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이하 태평양사)’를 ‘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이하 인도태평양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인도태평양사(INDOPA COM)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주도사령부(Supported Command)로서 예하부대인 주한미군(USFK)과 주일미군(USFJ)의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4월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美인도태평양 사령관(해군 대장)은 2021 ~ 2026회계연도까지 향후 6년에 걸쳐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³⁷⁾ 그는 2019년 2월 중순 의회에 출석하여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대대적인 군 현대화, 러시아의 미국 국익 저해 시도가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한 바 있다.³⁸⁾

36) 김도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4호(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8월 19일)

37) 이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장거리미사일 통합 등 200억 달러 요청,” Voice of America (2020년 4월 7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regain-advantage>(검색일:2020.09.11.)

38) Philip S. Davidson,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최대의 위협,” Indo-Pacific Defense Forum(2019년 3월 5일);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점(利點) 회복’(Regain the Advantage)’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이점 회복’ 전략은 위기 발생 시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잠재적 적국들에 ‘어떤 선제적 군사행동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재원 투입 계획은 ‘통합군 치사성’과 ‘전력 설계와 태세’, ‘동맹국과 파트너 강화’, ‘훈련과 실험, 혁신’, 그리고 ‘실행계획과 안보 조력’ 등 총 5가지 분야로 구분됐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적국들이 단순히 전력으로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밀타격 네트워크, 특히 지상 기반 대함, 대공 역량을 갖춘 통합군의 제1열도선 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제2열도선에는 통합방공미사일을 배치해야 하고, 분산과 역내 안정 유지력과 필요할 경우 전투작전을 유지하는 강화된 전력태세 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통합군 치사성’ 분야에는 총 17억6천만 달러를 투입해 광에 “36도 지속적인 통합방공체계”를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 방공체계가 자신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운용 지역을 포함해 국토를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전력 설계와 태세’ 계획은 대규모의 증강화된 군 기지 네트워크를 깨고, 미군을 역내 전 지역에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동맹국과 파트너 강화’ 분야에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통합 시스템, 그리고 보안 접근 제어를 사용해 확실한 ‘지휘, 통제, 통신’(C3)을 제공하는 ‘미션 파트너 환경’ 생성” 계획이 담겼다.

인도태평양전략에 이한 인도태평양사는 중국을 억제 및 압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런데 미북 비핵화 협상 중인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 핵미사일은 고도화 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현 문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초에 전작권을 전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의 조기 전환은 코로나 사태로 2단계인 완전작전능력(FOC) 검증훈련도 2020년에도 미실시하고 2021년 8월 12일 현재에도 북한 눈치보기와 코로나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https://ipdefenseforum.com/ko/2019/03/>(검색일: 2020.09.11.)

문제는 전작권이 조기에 전환되어 한국군 대장이 미래사령관을 맡게될 경우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소통이 부사령관인 미군 대장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연합사령관에게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 역할을 하는 유엔 사령관과의 관계에서도 미래사 체제에서는 협조가 어렵게 된다. 이는 곧바로 美증원전력문제와도 연관된다. 인도-태평양전략이 강화되면서 인도태평양사의 작전지휘를 받는 주한미군(USFK)이 연합사 및 장차 미래사의 미측 주요전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지휘관계 및 협력 등 작전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만일의 경우 미국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으로 보임하지 않고 유엔군사령관도 겸무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반중(反中)특임부대 창설과 전략무기 배치 추진 문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반중(反中)특임부대인 다영역특임단(MDTF; Multi-Domain Task Forces)’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1.5년 후 창설을 목표로 하는 이 부대는 중국의 아태지역 전력에 맞서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부대로 규모는 작지만, 방공포병과 항공특임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지원받게 된다. 이 부대를 지원하는 첨단 무기들이 현재 속속 개발되고 있다. B-2A 스텔스 폭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인 B-21 레이더(Raider·습격자)와 무인잠수정(UUV), 장거리 정밀타격체(LRPM),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들 첨단무기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미국은 이 가운데 사거리 1천km 안팎의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전략무기를 한국 등 아태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 국방부가 2020년 9월 1일(현지시간)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향후 10년간 최소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³⁹⁾

39) 김귀근, “[김귀근의 병영특특] ‘인도태평양관 나토’ 뜨나…미, 대중연합체 구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사드(THAAD)가 작전배치되어 있으므로 미군의 전략무기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한국 측 논리가 미국에 언제까지 먹힐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중국은 각종 채널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드배치시에도 중국이 경제 및 관광 중단 등 초강수 대량보복을 했는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시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략 방향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조정과 주한 미군 감축 우려

美합참은 현재 전략환경에 적절하고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가방위전략(NDS)과 일치하도록 전투사령부에 배정된 모든 임무와 지시에 대해 수개월이 걸리는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몇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국방부가 2020년 7월 17일(현지시간)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소개했다.⁴⁰⁾ 그는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⁴¹⁾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는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국방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상:

중국 봉쇄 ‘동맹 줄세우기’ 본격화...“미국·중국 중 선택하라” 압박 가중”

『연합뉴스』(2020년 9월 5일): 미국이 중국 핵탄두 수량을 공개한 것은 이해적인 일이며 중국은 사실을 왜곡했다며 발끈하고 있다.

40) 황준범, “미 국방장관 ‘인도·태평양사령부 재배치 검토할 것,’” 『한겨레』(2020년 7월 19일)

41) 류지복, “전세계 미군 재배치 역점사업 제시...주한미군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대상,” 『연합뉴스』(2020년 7월 18일):https://www.yna.co.kr/view/AKR20200718026300_071(검색일: 2020.09.11.)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⁴²⁾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일환으로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서(2020.07.17.)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하고 2021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15일 아프간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선언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급속히 장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해외로 도주하고 정부는 항복하며, 미국이 20년간 무기와 장비를 무려 1조달러(1315조)를 지원한 아프간군이 맥없이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고 바이든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함과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미중경쟁이 심화되고 반중전선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위험한 줄타기를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리한 전작권 조기 전환 및 미래사령부 창설과 한국군 사령관 보임 문제, 유엔사의 위상 및 역할 변화 등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3. 제기된 안보현안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선택 방향

가. 전작권 조기 전환 정지 및 현 유엔사/연합사 체제 유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2018년부터 시작된 비핵화 협상기간에도 계속 고도화 되고 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2020년 7월 8일(현지시간) 민간위성 사진들을 토대로 평양 인근 원로리에서 핵탄두 제작 공장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핵시설의 존재를 공개했다.⁴³⁾ 이는 북한이 걸론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실제론 평양 주변에 ‘핵벨트’를 새롭게 구축하고 비밀 핵시설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

42) WSJ의 보도가 맞다면 국방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잠정적으로 윤곽을 그리고 백악관에 이를 제시했을 가능성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전체가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먼저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WSJ 보도가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43) 신규진, “우라늄 농축-ICBM 조립 이어 탄두공장---평양 인근 ‘핵벨트,’ 『조선일보』 (2020년 7월 10일) A8면.

이 높다. 미 정보당국은 수년 전부터 2020년경 북한이 최대 100여개의 핵탄두를 제작 보유할 걸로 추정해 왔다. 또한 북한이 화성급 ICBM의 잇단 발사 성공 이후 핵탄두 소형화는 물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상당 수준에 올랐을 것이라 평가가 많다.

2021년 4월 1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1년여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해 공개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보고서에 따르면,⁴⁴⁾ 2019년 말 기준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 총량은 30~63kg, 농축우라늄 총량은 최소 175kg에서 최대 645kg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오는 2027년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확보할 수 있는 핵무기 수량은 151~242개로 전망됐다. 수십 기의 이동식 ICBM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미사일의 사거리, 정확도, 폭발력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향후 핵 선제 공격(preemption)을 포함,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로는 △협박·강압·억제 목적의 핵무기 사용 △제한적 핵무기 사용(limited nuclear use) △핵무기의 대규모 사용(major warfare with nuclear weapons)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와해 △‘핵확산’ 등이 거론됐다. 특히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과 관련, 서울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삼고, 이들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통해 한·미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라 전망이 제시됐다. 만약 한·미의 반격이 이어질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나 일본,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까지 위협하고 나설 가능성도 나왔다. 북한은 전쟁 초반에만 40~60개의 핵무기를 써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이상 보유하게 되는 순간, 이를 해외에 판매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서 ‘핵확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현재 위성이 없는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기도 전략타격하기도 어렵다는데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44) 아산정책연구원·미국 랜드연구소,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4)

사용하고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핵미사일의 기습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발사징후를 탐지하여 타격한다는 Kill-Chain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형 공중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남한 전지역을 방어하기 어렵다. 사실상 한국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 및 방어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중심의 한미연합방어체제, 특히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군사령관(4성장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6.25전쟁시에도 미 합참은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고 해공군만으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8일 한강이남에서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 당시 미 극동사령관의 판단과 건의에 의해서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음을 상기할 때, 미 4성장군의 역할은 한국안보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구비하기 전에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서 미래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만일 일반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회장이 되지 않고 부회장이 된다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어찌 될 것인지 자명한 이치다. 또 현 유엔사/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유사시 전력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와의 협력관계에서도 효율적이다.⁴⁵⁾ 왜냐하면 전작권이 전환되고 미래사가 창설되어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관리 권한과 전력제공 임무는 유엔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 증원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해서 특히 항공모함 5개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에 대해서 한국군 사령관은 이를 증원시킬 역량도 부족하며 지휘통제할 능력도 결여돼 있는 것이 필자의 3년 유엔사/연합사 경험에 의한 평가이다.

나. 민주주의 동맹과 안보다이아몬드에 적극 참여: 전술핵공유

현재 한국은 미중패권체제하에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안보체제를 우선 구축하고 장차 한국-베트남-뉴질랜드가 포함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안보체제를 구축 또는 D10 다자협력 및

45) 이와 관련해서는 김기호, “美, 유엔사 재활성화 ‘동아시아판 나토’ 만든다,” 『新東亞』 2019년 12월 호 참조

다자동맹을 추진하려 하고 있기에 언제까지 중간지대에 있기는 곤란하다. 특히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 D10에 참여하는 것은 안보뿐만 아니라 중국 종속 경향의 경제도 다변화 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안보와 경제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하나를 더 우선해서 선택해야 한다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안보를 우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으로 북핵미사일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미니트맨Ⅲ가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도달하는데 무려 약 30분이 걸린다. 반면 북한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과 600mm 초대구경 방사포는 10여분이면 남한 전지역에 떨어진다. 또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와 전략원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것을 교시했다. 그래서 북한핵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가용한 현금과 같은 핵즉응전력이 필요하다. 전술핵 재배치가 곤란하면 나토식 전술핵무기 공유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이는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있어야 가능한데 바로 쿼드와 쿼드 플러스 같은 대중연합체가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현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안보전략 방향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일본과 버금가는 지위로 쿼드 플러스에 참가하거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단 기간내 기존 쿼드에 한국이 포함된 펜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탄력을 받아 민주주의 동맹 D10에 참여하고, 참가국과 지소미아를 체결,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NATO처럼 전술핵 공유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전술핵 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술핵을 공유하는 것이 북핵미사일 억제와 방위를 위한 최선의 안보전략 대안이 될것이다.

다. 자위 수준의 대북억제와 대주변국 거부전략 능력 구비

현재 한국의 안보 수준은 북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세계경제 대국 12위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예산을 복지비에 대거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100년 대계를 튼튼히 세우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 독자적으로 자위 차원의 거부

적 억제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전력의 구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안보와 방위는 한미연합체제에 의해 달성됨으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쿼드플러스나 펜타에 가입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7개국이 포함된 D10 다자안보협력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한미미사일 협정과 원자력협정을 개선하여 약4,500톤 규모의 바라꾸다급 전략원잠(농축 우라늄 기반)과 SLBM 보유도 가능해 대북한 억제능력은 물론 대주변국에 대한 거부적 억제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한미미사일 협정의 개선과정처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여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포화상태인 플로토늄 재처리 허가과 20%수준의 우라늄 농축으로 4,500~5,000톤급 또는 그 이상의 전략원잠(SSBN)을 구비해야 한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도-태평양이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해, 서해, 남해와 태평양과 남중국해 등을 고려해서 여러척의 전략원잠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원잠은 최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0~20기 이상 탑재하여 거부적 억제전략 무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핵위협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지만 주변국의 잠재위협에도 인도-태평양전략에 참가하더라도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전략원잠(SSBN)을 반드시 전력화해야 할 것이다. 전술핵 공유와 함께 전략원잠을 구비하면 자위수준의 대북억제와 대주변국 거부전략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을 것이 확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외경제의 비중을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등 쿼드 7개국과 유럽 등 D10국으로 다변화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사드 보복때 중국의 행태를 겪었지만 만일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면 한중관계는 왕조시대의 조공관계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V. 결 론

본 논문은 트럼프 시대에 이어 바이든 시대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중전선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기된 안보현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안보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태동배경과 반중전선의 확장을 분석하기 위해 아베-트럼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통한 반중전선 확장 전략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트럼프 시대에 공개된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략문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반중전선확대와 인도-태평양전략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제기된 몇가지 안보현안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보고서와 미 행정부에서 공식 발간된 전략문서를 정밀 분석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태동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아베-트럼프의 이해가 일치하고 상승작용을 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게 됨을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항하여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트럼프가 받아들여 쿼드 등 역내에서 네트워크화된 대중연합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구체화함을 식별했다.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계승하여 반중전선을 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로 더욱 확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트럼프 시대에는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을 중심으로 쿼드 및 쿼드플러스로 대중연합체를 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시대에는 반중전선을 더욱 확대하여 선진국 G7에 한국 등이 포함된 D10으로 민주주의 동맹을 확대시키는 추세이다. 특히 인도-태평양으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가세하고 NATO까지 합세시키고 있다.

트럼프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대중전략은 인도-태평양전략서로 가시화됐다.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40년 동안 취해왔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전제하면서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美-中 간 경제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명확하게 중국의 위협을 적시하고 중국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심하여 의회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군과 정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 및 작전 개념과 전력증강을 무섭게 추진하고 있음을 식별했다.

인도태평양사의 전력증강과 관련하여 지휘관계에 있는 주한미군(USFK)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미래사의 사령관 한국군 대장 보임계획으로 인하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유엔사의 위상 및 역할 변화와 연계되어 현 정전관리와 유사시 전력제공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방부가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전부 재조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도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 분담 마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제기된 안보현안에 대한 3가지 안보전략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북핵미사일이 더욱 고도화 되고 있고 한국군 단독으로 억제 및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전작권의 무리한 조기 전환을 정지시키고 현 유엔사/연합사 체제를 유지하여 날로 강력해 지고 있는 인도태평양사와 주한미군사와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지속되게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전략대안이라고 적시하였다.

둘째, 장차 한국은 중국의 보복예상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 D10에 참여하여 나토식 전술핵공유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대중국 경제적 비중으로 D10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안보전략환경 변화와 북핵위협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대북억제전략과 대주변국 거부전략 능력의 구비를 안보전략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에 비해 안보 및 군사적으로는 제대로 된 변변한 전략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전략과 펜타 및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여 미국의 지지하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SLBM을 장착한 전략원잠(SSBN)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 연합사 체제나 장차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 체제가 되더라도 한미연합작전에 의해 한국의 안보와 방어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진화하고 강력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안보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고 경제는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 2021.08.13]

[논문심사일 : 2021.08.23]

[논문수정일 : 2021.08.27]

[게재확정일 : 2021.09.1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기호, “美, 유엔사 재할성화 ‘동아시아판 나토’ 만든다,” 『新東亞』 2019년 12월호.
- , “文, ‘대환상’ 못 깨면 안보 위태로워져 : 비핵화 협상 2年 ‘거짓 평화’가 남긴 것,” 『新東亞』, 2020년 2월호
- 김도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4호(서울: 국회입법조사처)(2020년 8월 19일).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제3판. 서울: 법문사, 2013.
- 김진명, “일단 한국 빼고… 미·일·호주·인도, 나토 같은 기구 추진: 비건 “쿼드, 국제 공식기구로,” 『조선일보』, 2020년 9월 2일
- 류지복, “전세계 미군 재배치 역점사업 제시…주한미군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대상,” 『연합뉴스』(2020년 7월 18일).
- 아산정책연구원·미국 랜드연구소,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4.
- 안기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issue BRIEH』, 2019-26 (아산정책연구원, 2019.10.21.)
- 양연희,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펜 앤드 마이크』(2020년 7월 8일)
- 우정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맞는 말인가,” 『MK 매일경제』, 2020년 9월 7일.
- 이상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24권 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8.
- 이재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평가: 미국의 위협 인식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KIMS, 2019.6.20.

이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장거리미사일 통합 등 200억 달러 요청,” 『VOA』, 2020년 4월 7일.

---,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 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VOA』, 2020년 7월 3일.

임상훈(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대중국 포위망 퀴드, 투키디데스의 교훈), “함정에 빠진 한국, 미국과 일본의 노림수,” 『ohmynews』, 2021. 3월 19일.

조은일,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2호 2020년(여름) 통권 109호.

전경웅, “美, 인도·태평양 전력 강화 ‘태평양 억제 구상’ 공개, 중국 군사력 강화에 맞서… 미군 전력 확충, 군수물류체계 개선, 재정 투입 강조,” 『New Daily』, 2020년 5월 29일.

2. 외국문헌

Biden Jr. President Joseph R.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SSG)*(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NSC, March 2021)

D.O.D,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June 1, 2019)

Glosserman Brad, *Peack Japan: The End of Great Ambition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April. 2019.

Hillary Clinton,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in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1/10/11/americas-pacific-century/>).

Mearsheimer, John J.,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8), Preface

Medcalf Rory, “Indo-Pacific Visions: Giving Solidarity a Chance,” *Asia Policy*, volume 14, number 3 ,july 2019.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te House, Washington D.C. , Dec. 2017)

- ,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 Washington D.C.2020.05.21.)
- Nicholas Burns, *Stronger Together : A Strategy to Revitalize Transatlantic Power*, HARVARD Kennedy School, December 2020
- Organski A.F.K. , *World Polictics*(The University of Michigan, Jan, 1968), Preface.
- Philip S. Davidson,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최대의 위협,”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9년 3월 5일.
- SEN. Jim Inhofe and SEN. Jack Reed,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War On The Rocks, May, 2020.
- US Congress, 2017, Public Law 115-91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Pentagon, Washington D.C., Jan. 2018)

Abstract

Expansion of the US Anti-China Front and Korea's Security Strategic Direction: Focus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y

Kim Ki 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nti-China front, which is expanding further in the Biden era following the Trump era, focus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is on Korean securit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security strategy.

In the Trump era, the United States pursued a “security diamond strategy,” tying countries in the region into a mass coalition such as a quad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n the Biden era, the US is expanding its anti-China front to Europe and NATO under the banner of “democratic alliance.”

The US strategy for China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strategy to achieve overwhelming dominance over China in the Indo-Pacific, and the Congress leads the military and government by making bills and budgeting, driving force enhancement.

The problem is that Korea is excluded from the US democratic alliance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Moreover, Korea is not able to independently defe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o it is trying to transfer its OPCON at an early stage. For security reasons, this is no different from suicid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ree directions for Korea's security strategy. First, it should avoid unreasonable early transition of

OPCON and maintain the current UNC/CFC system. Second, it should immediately participate i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democratic alliance, and thirdly, prepare for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potential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y must have self-defense capabilities commensurate with their economic power.

Key words : Security Diamond Initiative, FOIP;Freely and Opend Indo-Pacific, Security Strategic Direction

보훈단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 설문조사 기법을 통한 연구 -

문근형 *

- I. 서 언
- II. 보훈단체와 국가안보
- III. 대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 IV. 보훈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 V. 결 언

논문요약

대한민국은 1953년 7월27일 휴전 이후 아직 북한과 휴전 중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보훈단체는 1950년 6·25전쟁 이후 진정한 평화통일의 미래를 위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를 지키다 희생한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보훈가족들 덕분에 6·25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걱정했던 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들어섰다. 6·25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안보 선진국,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보훈단체가 지속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활동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실천을 감동적으로 전달하도록 보훈단체가 애국정신함양의 중심적인 시민단체로 위상정립을 해야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본 결과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안보단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였으나 안보의식은 투철하였고 보훈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훈단체에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보훈단체의 활동을 홍보하면서 각 단체의 위상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보훈단체는 조직의 상징성과 활동여부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보훈단체가 인정을 받고 활동에 제한이 없을 때 국가안보와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보훈정책, 제도와 함께 보훈단체의 위상이 잘 정립되어 있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이다.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에서 2021년 7월에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국민들에게 보훈단체가 올바르게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각 보훈단체에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선진국에 걸맞는 보훈단체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제어 : 공범보훈단체, 재향군인회, 국가안보, 보훈, 설문조사

I. 서 언

보훈단체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확립되어 있는 국가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함께 국가와 민족이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다. 2021년 6월 30일 보도된 국방일보 기사내용에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이 보훈의식이 높으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커진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가보훈처가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보훈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다수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려는 ‘보훈의식’이 높으면 애국심(79.6%)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79.3%)이 커지고, 사회참여 의식(74.6%)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72.9%)이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훈·유공자 단체(75.0%)와 학교·교육기관(71.1%)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¹⁾

보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분열 보다 사회통합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훈단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인 시각에는 보훈단체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정치이념이 짙은 보수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는 보훈의 중요성과 조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시대가 변화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보훈 대상은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 등의 국가 수호 활동, 민주화운동을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 발전과 보훈단체와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애국자들은 국가와 민족 공동체가 도덕적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애국심의 도덕적 의미를 성찰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인 생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야 한다.

1) 국방일보 2021.6.30. 보도내용

보훈의식과 보훈단체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훈단체가 대학생들의 의식에 어떻게 인식되어 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올바른 보훈단체로서 인식될지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기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선진국으로 앞장서는데 기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젊은 대학생들이 보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의 중요성을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한층 더 밝을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보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접촉하였다.

이 논문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 5월 중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하여 6개 지역에서 대학생 163명이 응답한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단행본, 논문과 보도자료 등을 통한 문헌적 접근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 문항을 계획하면서 가정은 ‘첫째, 대학생들이 안보단체에 대하여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안보의식과 안보활동 동참의식은 강할 것이다. 둘째, 국가이익을 위해서 안보(국방)와 경제, 정치 중에 안보(국방)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셋째, 안보단체의 활동 중에 군 적극지원에 관심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두고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온라인을 활용, 설문조사 문항을 입력하고, 교수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설문 후에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점 척도 방법과 다중응답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보훈단체는 국가민족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관계, 국방의 의무 등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정체성은 남북한의 분단과 6·25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 위기 시에 솔선수범하여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실천하여야 한다. 보훈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950년 6·25전쟁,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7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한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보훈단체의 국가 안보인식 강화와 나라사랑의 활동영역을 증대하며, 정부와의 보훈 안보 정책을 통하여 대국민적인 보훈인식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보훈단체가 각 단체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 대한민국 보훈정책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보훈정책도 선진국에 맞는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II. 보훈단체와 국가안보

1. 주요국가 보훈단체 현황

20세기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국민의 희생과 숭고함을 보호하는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주요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을 편성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가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훈단체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보훈단체는 각 국가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국민의 애국심을 독려하는 보훈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역할도 상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가들 중 주요 선진국의 보훈단체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한국의 보훈단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보훈단체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구분없이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많다. 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훈단체의 활동을 연구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훈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가. 미국

미국에는 현재 총 219개의 단체가 제대군인 단체 협력부서에 등재되어 있다. 이중 48개 제대군인 단체는 의회 또는 제대군인부에 등록되어 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미국재향군인회(AL, American Legion)이다. 1919년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그 회원수가 300만 명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15,000여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본부는 인디애나에 있고 워싱턴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300명 가량의 정규 인력 외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자원 봉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²⁾ 다음으로는 해외참전협회(VFW, Veterans of foreign

Wars)이다. “생존자에 대한 원조를 통해 사망한 참전자들을 영예한다”는 모토하에 VFW는 수백만 명의 생존 군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현역군인들에게 무료 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기념하기 위한 자금 모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³⁾

또한 미국참전군인회(AMVETS, American Veterans of World War II, Korea and Vietnam)는 미국 최초의 제대군인 지원기관의 하나로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약 40개 주에서 제대군인 지원 서비스와 보상요구 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금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⁴⁾

상이군인회(DAV, Disabled American Veterans)는 1920년에 설립되고 1932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기관으로 수백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 상이군인의 공식대표 조직이다. 미국 2백만 상이군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가적 네트워크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없고 회비와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다.⁵⁾

미국 마비상이군인회(PAV,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는 1946년에 설립되어 참전군인의 척추상해 및 기능장애 지원을 위한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다.⁶⁾ 맹인제대군인회 (BVA, Blinded Veterans Association)는 맹인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미국 전역의 맹인들의 재활상담, 재활 훈련 및 그 외의 수혜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⁷⁾ 상이군인메달수여회(MPH, Military order of the Purple Heart) 군인들의 동지애를 제고하는 기관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⁸⁾ 미국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와 회원 수는 <표1>과 같다.

2) <https://www.legion.org/> (검색일 : 2021. 6. 29)

3) <http://www.vfw.org/> (검색일 : 2021. 6. 29)

4) <https://amvets.org/> (검색일 : 2021. 6. 29)

5) <https://www.dav.org/> (검색일 : 2021. 6. 29)

6) <http://www.pav.org/> (검색일 : 2021. 6. 29)

7) <https://bva.org/> (검색일 : 2021. 6. 29)

8) <https://www.purpleheart.org/> (검색일 : 2021. 6. 29)

〈표 1〉 미국 주요단체 설립연도 / 회원수

단체명	본부 소재지	설립연도	회원수(명)
미국 제대군인회	인디애나폴리스	1919.3.15	2,800,000
해외참전협회	켄사스시티	1899	1,900,000
미군참전군인회	랜햄	1944.12.9	260,000
상이군인회	콜드 스프링스	1921	1,252,188
미국 마비상이군인회	워싱턴 D.C	1947.4.14	21,072
맹인제대군인회	워싱턴 D.C	1945.3.28	10,500
상이군인메달 수여회	스프링필드	1932.11.8	36,500

나. 영국

미국과 함께 선진국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보훈단체의 활동이 왕성하다. 영국의 먼저 대표적인 단체가 영국재향군인회(Royal British Legion)이다. 영국재향군인회는 자선단체로서 수백만의 제대군인과 현역군인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 사회적, 감성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이 단체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약 천만 명이 이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1921년에 제대군인 단체를 위해 창립되어 45만 명의 회원들이 있다. 제대군인들의 복지와 이익 그리고 추모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 예산은 포피(Poppy) 운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포피(Poppy)는 양귀비꽃이며 포피운동은 적색종이로 만든 포피모양의 꽃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군인가족부조회는 1997년 1월 1일자로 종전의 군인가족회와 군인부조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자선단체이다. 여왕과 여왕어머니가 고문이고 총재는 마이클 왕자이며,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에는 많은 보훈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보훈단체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다.⁹⁾

9) <https://www.mpva.go.kr/mpva/> (검색일 : 2021. 6. 21)

〈표 2〉 영국 주요 보훈단체 현황

- 영국 지체절단상이군인회 ○ 알프레드해군회 ○ 물망회 ○ 극동기금
- 대영전쟁미망인회 ○ 버마수훈자회 ○ 제대군인 정신복지회
- 성 요한 훈장/영국적십자회 공동위원회 ○ 왕립애국기금공단,
- 성 던스턴 회 ○ 육군부조기금 ○ 헤이그백작기금,
- 공군회 ○ 영국한국참전용사협회 ○ 알프레드해군회 등

다. 프랑스

프랑스에는 약 37개의 보훈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규모의 단체는 약 400개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단체 자산을 증대시켜 주고 있으며 사무실도 통합 중이다. 프랑스 보훈단체의 특색은 다양성이다. 아래 표의 보훈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표 3〉 프랑스 정부지원 보훈단체 현황

- 전국 인도차이나 참전자, 전우 및 기념협회
- 라인과 다뉴브회 ○ 참전자 및 전쟁희생자 전국연합회
- 외인부대 제대자연합회 ○ 해외거주 참전자 전국연합회
- 알제리, 모로코, 튀니스 참전자 전국연합회
- 참전자 및 전쟁희생자 협회 프랑스 조합 ○ 참전자 전국조합
- 인도차이나, 해외작전단, 북아프리카 참전자 전국조합
- 전쟁 중상이군 (중절단자) 전국연합회
- 알제리, 튀니스, 모로코 참전포로 전국연합회
- 레지스망스 참전자 전국협회 ○ 전쟁탈출자 전국조합
- 가칭 ‘해방동지 원조회’ 조합 ○ 자유프랑스 기금 등

미국, 영국, 프랑스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는 보훈단체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적극적인 활동 중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도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제대군인과 보훈단체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¹⁰⁾ 보훈은 이념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보훈단체 역할

동서고금을 통해 어느 나라이든지 보훈은 사회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이념이다. 펠로폰네소스 1차 전쟁(BC 431) 당시 아테네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를 위한 연설에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언급하였듯이 보훈정책의 핵심은 과거 국난극복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훈단체를 특별히 예우해 왔다. 우리나라 보훈공법단체 현황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보훈공법단체 현황¹²⁾

단체명	소재지	회원 수(명)
광복회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5 광복회관 4층	8,22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06,133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	83,00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중앙보훈회관	70,130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내)	119,000
4·19 민주혁명회		200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종로구 새문안로 17	133
4·19 혁명공로자회	(4·19도서관내)	277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은평구 통일로 684, 20동	3,22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7	140,000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강남구 테헤란로 621 강남벤처랜드빌딩 2층	66,325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골재회관 3, 5층)	120,0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0,624,672

10) 권기숙, “러시아 제대군인과 보훈단체의 사회적 역할”,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1호(한국보훈학회, 2012), p.109.

11) 정상호, “보훈단체의 민주화 방안 연구”, 『한국정치연구』 2015년 봄호(제8권 제1호),(한국정치학회, 2015), p.128.

12) https://www.mpva.go.kr/mpva/data/situation03View.do?info_id=7175 (검색일 : 2021. 6. 29.)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등 14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대부분 보훈단체에 약 2백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공법보훈단체는 ‘국가한국보훈단체의 갈등요인과 해소방안 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수행자회법’, ‘재향군인회법’ 등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로 단체별 정관은 제·개정 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단체를 보훈공법단체라고 한다. 한국의 보훈단체는 한반도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보훈단체 역할은 ①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 ②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체화시키는 역할, ③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 ④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 ⑤ 북한체제의 부도덕성을 환기시키는 역할, ⑥ 국가의 진실을 일깨우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¹³⁾

국가보훈은 바로 이러한 애국과 안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마땅한 예우,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로 시작되었다. 보훈공법단체는 시민단체가 행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나라사랑과 안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단체로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보훈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단체와 연계한 활동 실천이 강조된다.

국가보훈의 저변에는 애국심과 함께 안보의식이 뒷받침되고 있다. 안보의식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이다.¹⁴⁾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다. 그 배경에는 젊은 세대들은 한국전쟁의 시대적 영향이 적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과 변화되는 안보 상황에 대해 안보 교육정책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 배양에 있어서 보훈단체는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¹⁵⁾

보훈단체는 국가안보와 호국정신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국가와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가보훈과 국가정체성, 국가보훈과 역사관, 국가보훈과 국민통합, 국가보훈과 안보,

13) 박효중,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12), pp.44-57.

14) 성백선, “안보교육과 안보의식 향상”,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2014). p.2.

15) 성백선(2014), p.3.

국가안보와 통일 등의 논의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애국심과 나라 사랑 정신은 사적 이익이기보다는 공익과 공공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공공재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보훈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과 보훈가족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단체와의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편은 아니다.

보훈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훈단체들이 조직구성원의 권익에만 중점을 두고 활동 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단체별로 각 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공익활동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훈단체들은 조직의 특성상 해당 단체 이념과 정신을 확립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정신 고양, 상이군경회 등 6.25관련 단체들은 국민 호국의식 고취활동, 4.19혁명 단체는 운동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하고 재향군인회는 조직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 호국, 보훈의식 등 애국심 함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¹⁶⁾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기본적인 기초가 대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일 것이다.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교를 거쳐 국가관이 형성되어 있고, 장차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방의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살펴보면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신세대인 젊은층의 안보의식 조사에서 안보 개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세대 대학생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 및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을 낮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⁷⁾

국가보훈이 잘 실천되려면 보훈단체의 활동은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생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알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국가 안보와 애국심 배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보훈단체들의 활동과 인지정도 등은 다음 장에서 설문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16) 정일권, “국가보훈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 논문(2003), p.61.

17) 이성춘,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p.424.

Ⅲ. 대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설문지 구성, 연구대상 및 분석의 틀

설문문항을 구성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대학생들이 보훈단체에 대한 인식정도 와 보훈단체에 바라는 정책방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대 학생들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안보의식은 강할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설문항목은 COVID-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면서 항목 수는 20문항으로 단순화 하였다. 아래 <표 5>는 설문지를 구성한 내용이다.

<표 5> 설문지 구성

구 분	문 항	번호	문항수	방법
보훈단체 인지도/추진 방향	인지도, 신뢰도, 협력정도, 보훈활동 우선순위, 안보의식 정도	1, 3-7, 9-13, 15	12	5점 척도
	14개 공법보훈단체 인지정도, 안보활동 중점, 국가안보 우선순위	2, 8, 14	3	다중 반응
자유제언	정책추진방향	16	1	기술
인구통계적 분석	성별, 학력, 지역, 전공분야	17-20	4	

설문지 내용을 구성한 후 설문지 작성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대상자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주소를 알려주면 응답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에게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보상책을 마련하여 설문을 독려한 결과 163명의 응답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설문형식은 설문기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ikert 5점 척도를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 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 설문결과 항목별 분석

설문결과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각 항목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¹⁸⁾ 카이제곱 유의확률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해 본 결과 아래 <표 6>의 결과치를 나타냈다. 근사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으면 두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표 6> 근사 유의확률

구 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0.151a	4	.038
우도비	10.237	4	.037
선형 대 선형결합	7.677	1	.006
유효 케이스 수	162		

a. 3 셀 (3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다.
최소 기대빈도는 1.06이다.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학생 106명(65%), 여학생 57명(35%)로 나타나 남학생 응답인원이 여학생의 약 2배를 나타냈다.

<표 7> 성별 분포

구 분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남	106	65.0	65.0	65.0
	여	57	35.0	35.0	100.0
	전 체	163	100.0	100.0	

18) 노형진, 조진생, “SPSS를 활용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경기, 학현사, 2016), pp.1.-338.

학년별 분포는 <표 8>에서처럼 응답인원 163명중 대학교 1학년은 53명(32.5%), 2학년은 43명(26.4%), 3학년은 30명(18.4%), 4학년은 31명(19%), 그리고 대학원생 6명(3.7%)이 응답하여 학년별로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8> 학년별 분포

구 분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대학교 1학년	53	32.5	32.5	32.5
	대학교 2학년	43	26.4	26.4	58.9
	대학교 3학년	30	18.4	18.4	77.3
	대학교 4학년	31	19.0	19.0	96.3
	대학원생	6	3.7	3.7	100.0
	전 체	163	100.0	100.0	

대학생들이 보훈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현황은 <표 9>처럼 긍정이 4.3%로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대학생들 중 많은 학생이 보훈단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보훈단체에서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표 9> 보훈단체에 대한 인지여부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그렇다	3	1.8	1.8	1.8
	그렇다	4	2.5	2.5	4.3
	보통이다	36	22.1	22.1	26.4
	그렇지 않다	64	39.3	39.3	65.6
	전혀 그렇지 않다	56	34.4	34.4	100.0
	전 체	163	100.0	100.0	

〈표 10〉 보훈공법단체별 인지도

구 분		반응	
		N	%
공법보훈단체 인지도a	1. 광복회	70	11.5%
	2. 상이군경회	40	6.6%
	3. 전몰군경유족회	31	5.1%
	4. 전몰군경미망인회	20	3.3%
	5.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25	4.1%
	6. 무공수훈자회	34	5.6%
	7. 4.19 민주혁명회	47	7.7%
	8.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53	8.7%
	9. 4.19 혁명공로자회	26	4.3%
	10. 특수임무유공자회	33	5.4%
	11. 고엽제전우회	16	2.6%
	12. 6.25참전 유공자회	100	16.4%
	13. 월남참전자회	57	9.4%
	14. 재향군인회	56	9.2%
전 체		608	100.0

a. 값 1을 가지는 이분형 변수 집단이다.

보훈공법단체별 대학생들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인지하고 있는 단체는 ‘6.25 참전 유공자회’이고 다음으로는 광복회, 월남참전자회에 이어서 재향군인회가 4번째의 인지도를 보였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가장 많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4개의 공법단체 중에 4번째의 인지도를 보여주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낮은 인지도는 고엽제 전우회로 나타났다.

별도의 문항을 구성하여 재향군인회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결과 ‘매우 그렇다.’ 11명(6.7%), ‘그렇다.’ 12명(7.4%), ‘보통이다.’ 53명(32.5%), ‘그렇지 않다.’ 55명(33.7%),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19.6%)로 응답하여 재향군인회에 대해 많은 인원이 미인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향군인회가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향군인회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응답자에 대한 전공을 확인해본 결과 공학계 학생이 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계(23.3%), 예술계(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 분포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전공별 분포

구 분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인문계	28	17.2	17.3	17.3
	사회계	38	23.3	23.5	40.7
	공학계	52	31.9	32.1	72.8
	자연계	4	2.5	2.5	75.3
	의학계	10	6.1	6.2	81.5
	예술계	31	18.4	18.5	100.0
	전 체	163	100.0	100.0	
전 체		163	100.0		

전공과 연계하여 안보의식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항목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해 보았다. 교차분석결과 <표 12>에서처럼 자연계, 예술계 학생이 기타 전공학생 보다 안보의식이 조금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전공과의 관계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공과의 상관성 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

〈표 12〉 전공 및 안보의식 정도 교차분석

구 분	전공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예술	
매우높다	3	8	5	0	2	3	21
높다	17	17	12	0	2	3	51
보통이다	8	12	32	3	4	20	79
낮다	0	0	3	1	2	3	9
매우낮다	0	1	0	0	0	2	3
전 체	28	38	52	4	10	31	163
긍정비율(%)	71	66	32	0	40	19	

대학생들이 안보단체를 인지정도를 문항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대학생은 4.3%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이 74.4%로 안보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단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안보의식 수준을 확인한 문항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44.2%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답변은 7.3%로 안보단체는 잘 모르지만 안보의식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안보단체를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보단체의 활동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로 인지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뢰하지 않는 층은 11.4%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한 문항에서도 중요하다고 답변한 인원이 57.7%,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인원이 6.1%로 나타나 안보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확인하였다.

안보단체 신뢰도 문항과 함께 안보단체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과 안보단체가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은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안보단체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43.5%)과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26.3%)을 보면 남북관계에는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문항으로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안보(국방), 정치, 경제, 자연재해, 주변국과의 관계’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답변결과는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학생

들이(46%) 안보(국방) 불안이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가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관계(18.4%), 경제 불안(16.6%), 정치불안(15.3%), 자연재해(3.7%) 순으로 답하였다.

〈표 13〉 국가안보의 위협요소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보(국방) 불안	75	46.0	46.0	46.0
	정치 불안	25	15.3	15.3	61.3
	경제 불안	27	16.6	16.6	77.9
	자연재해	6	3.7	3.7	81.6
	주변국가와 관계	30	18.4	18.4	100.0
전 체		163	100.0	100.0	

안보단체 활동에 동참할 의향을 물어본 문항에서는 52.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답변결과는 〈표 14〉에서 보는 것 과 같다.

〈표 14〉 안보단체 활동 동참의사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25	15.3	15.5	15.5
	그렇다	61	37.4	37.9	53.4
	보통이다	58	35.6	36.0	89.4
	그렇지 않다	11	6.7	6.8	96.3
	전혀 그렇지 않다	6	3.7	3.7	100.0
	전체	161	98.8	100.0	
결측	시스템	2	1.2		
	전 체	163	100.0		

자유기술을 통해서는 69명의 학생이 답변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을 다시 확인 하였으며, 답변자 중에서도 유의미한 답변으로 42명만이 응답하여 25%만이 제언하였다. 제언내용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안보단체의 활동에 잘 모르겠으니 많은 홍보활동을 바란다는 답변이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 등을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현역 복지 및 세대군인 재취업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글을 기술하여 보훈단체가 추진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IV. 보훈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보훈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국가보훈처는 보훈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들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훈단체의 주 역할로서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정체성은 한 개인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국가의 체제가 존속하는데 필요한 ‘민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국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동일시하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충성심과 국민적 일체감은 한 국가의 국민을 다른 국가의 국민과 구별되게 해준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는 국가의 진실을 알리는 파수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교육하여야 한다.¹⁹⁾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보훈단체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계몽활동에 앞장서 왔다. 보훈단체의 냉철한 판단력 아래 진실의 왜곡은 없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전해주는 선배들이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보훈단체는 국가안보교육에 산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들과, 6·25 참전 국가유공자를 통한 올바른 대북인식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과 함께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후배를 위한 교육 선도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²⁰⁾

보훈단체는 관변단체, 어용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진한 보수 색채를 벗어나 시대적 추세를 맞게 보훈단체의 성격도 과거 폐쇄적 이권집단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권익단체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의 보훈단체들은 “정부 및 단체 차원의 복지혜택을 회원들에게 연계해주는 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자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다. 개방형 권익단체로 발돋움하

19) 차승만, 이현숙, “초중고 교과서 안보내용 분석과 국가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3호(한국보훈학회, 2012), pp.79-80.

20) 차승만, 이현숙(2012), pp.88-90.

기 위해 과거의 집단이거적인 단체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각 단체들이 서로 융화하고 단합하여 국익을 위해 서로 상호 협조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보훈단체를 둘러싼 물질적 이익과 분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필요하며 보훈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업무에 과중으로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보훈단체 중에 모든 조직을 통합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단체가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체는 현재 가장 조직력이 강하고 회원 수가 많은 재향군인회가 적격이라 판단된다. 중앙과 지방,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단위로서 안보단체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한 단체 사이의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과 교류 증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학생들의 사고는 건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보훈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보훈단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 보훈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합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보훈과 선양사업 그리고 안보교육에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도록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국민적 홍보활동과 안보교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초,중,고등 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들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일꾼이기에 이들에게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보훈단체가 통합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각 보훈단체에서도 국가보훈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 국민대상으로 각 단체들의 활동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보훈단체를 잘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보훈단체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보훈단체의 홍보활동에 앞서 국가안보와 애국활동을 강조하고 확산하는 안보단체로서 기본적인 위상정립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종류의 대상별로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중 보훈가족은 2019년 기준 총 34,084 가구 총 843,00명이다.²¹⁾ 총 가구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전공상 군경과 전몰/순직 군경 유족이 24,053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표 16>와 같다. 이들 보훈대상자들은 당당하게 그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 보훈단체는 주도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으면서 애국적인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전몰군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표 15> 보훈처 관리 보훈대상자 대상별 현황²²⁾

<p>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유족,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사망자유족,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18자유상이자, 재일확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유족,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유족</p>

<표 16>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²³⁾

(단위 : 명)

구 분	합계	전상·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기타 대상	
		본인	유족	유족	본인	유족
계	843,770	110,698	96,047	52,188	499,012	85,825
30세 미만	7,750	867	144	49	6,520	170
30-39세	26,449	9,370	726	164	15,616	573
40-49세	31,407	9,637	4,136	796	14,325	2,513
50-59세	64,484	9,485	11,303	2,482	30,207	11,007
60-69세	146,134	13,205	28,844	16,130	64,991	22,964
70세 이상	567,546	68,134	50,894	32,567	367,353	48,598

21) 『2019 보훈연감』 (국가보훈처, 2019), p.400./p.173.

22) 『2019 보훈연감』 (2019), p.403.

23) 『2019 보훈연감』 (2019), p.189.

적극적인 보훈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군복무를 모범적으로 마친 예비역 제대군인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안보교육 특강 등을 진행하여 국민교육에 앞장서는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민간 전문 교육단체, 교육부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 보훈안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훈단체가 주도적으로 나라사랑 보훈안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보훈단체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보훈대상자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력을 정비하고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력하여 보훈단체의 국가애국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지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보훈단체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및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보훈안보교육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보훈단체의 국가안보와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는 보훈단체 실무자들이 먼저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 애국심 등에 대해 이성적 판단, 감정,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보훈단체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제시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해야 한다. 보훈단체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 보훈 안보교육 실태와 방안에 대한 포럼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훈안보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실현과 정체성 확장에 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애국심이고 안보이다. 국가안보가 확실하고 국가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 인간 가치실현이 이루어 진다.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선진국과 복지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복지속에는 보훈대상자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복지와 보훈이 명확히 정립된 국가의 국민들은 애국심도 선진국이다, 이를 위해 보훈단체들이 선두에서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V. 결 언

대한민국은 1953년 7월27일 휴전 이후 아직 북한과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치 중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북한은 수많은 무력도발을 자행했었다. 이 때문에 보훈단체는 1950년 6·25전쟁 이후 진정한 평화통일의 미래를 위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를 지키다 희생한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보훈가족들 덕분에 6.25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격려했던 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들어섰다. 6·25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안보 선진국, 경제성공 국가로 발전하였다. 보훈단체가 지속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활동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화 이후 개인화, 세계화, 전통적 가치의 퇴조, 공동체 의식결여로 보훈이념이 희석되어지고 보훈 단체가 고립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인 개인주의 의식은 개인 자아정체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생활태도를 고양시키는 면도 있으나,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개인 희생을 지나치게 기피하여 공동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자리 잡아 과거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가치관을 반성적으로 성찰토록 하는 반면, 사회를 통합시켰던 전통적 규범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생각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으며, 보훈 개념 자체를 도외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훈단체들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의제와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의존적·수동적 활동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훈단체는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점점 고립화되고 있다. 이제는 현시대에 적응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보훈단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실천을 감동적으로 전달하여 보훈단체가 애국정신함양의 중심적인 시민단체로 위상정립을 해야 한다. 보훈단체의 위상정립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해야하고, 이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는 중요하다. 각종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보훈에 대한 국민적 정체성 확립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전쟁을 막기 위한 지혜를 가르치고, 평화

를 위해서는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안보교육을 자신있게 실천하여야 한다.

보훈단체는 조직의 상징성과 활동여부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추구하는 이념을 공고히 하려고 구성된 조직이다. 보훈단체가 인정을 받고 활동에 제한이 없을 때 국가안보와 평화변영이 보장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훈단체가 올바르게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각 보훈단체에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선진국에 걸맞는 보훈단체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논문투고일 : 2021.07.28]

[논문심사일 : 2021.08.11]

[논문수정일 : 2021.08.20]

[계재확정일 : 2021.09.13]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권기숙, “러시아 제대군인과 보훈단체의 사회적 역할”, 『한국보훈논총』제11권 제1호(한국보훈학회, 2012)
- 노형진, 조신생, “SPSS를 활용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경기, 학현사, 2016)
- 박효종,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제11권 제2호(한국보훈학회, 2012)
- 성백선, “안보교육과 안보의식 향상”,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2014)
- 이성춘,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 안성호, 손진원, “보훈단체의 위상정립 :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증대를 중심으로”, 『2012년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12)
- 정상호, “보훈단체의 민주화 방안 연구”, 『한국정치연구』2015년 봄호(제8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5)
- 정일권, “국가보훈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 논문(2003)
- 차승만, 이현숙, “초중고 교과서 안보내용 분석과 국가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제11권 제3호(한국보훈학회, 2012)

2. 기타

- 국방일보(2021. 6. 30일자)
- 『2019 보훈연감』(국가보훈처, 2019)
- <https://amvets.org/> (검색일 : 2021. 6. 29)
- <https://bva.org/> (검색일 : 2021. 6. 29)
- <https://www.dav.org/> (검색일 : 2021. 6. 29)
- <https://www.legion.org/> (검색일 : 2021. 6. 29)
- <https://www.mpva.go.kr/mpva/>(검색일 : 2021. 6. 21)
- <http://www.pav.org/> (검색일 : 2021. 6. 29)
- <https://www.purpleheart.org/> (검색일 : 2021. 6. 29)
- <http://www.vfw.org/> (검색일 : 2021. 6. 29)

Abstract

A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Veterans Organizations Based on the Survey

Moon Geunhyeong

South Kore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still in a truce with North Korea since the ceasefire on July 27, 1953. Veterans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their activities with a sense of mission to seek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true peaceful unification since the Korean War in 1950-1953. Thanks to the patriotic martyrs and veterans' families who sacrificed themselves in keeping with liberal democracy, a country that was worried about rebuilding its country after the Korean War has now entered an advanced country. After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into an advanced security country and an economic successful country. It was possible because the veterans' group continued to inherit the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In order to pass on the proud Republic of Korea to its descendants well, veterans' groups should establish a status as a central civic group for fostering patriotism so that they can deliver the spirit and practice of love for the country to teenagers in a touching way.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confirmed their thoughts on veterans organizations and found that interest in veterans organizations were low. Although interest in security organizations were low, the sense of security was strong an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veterans' organizations was confirmed. Through the survey, veterans organizations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the status of each organization while promoting veterans' activities with more

aggressiveness.

Veterans organizations are organizations that are respected and loved by the people depending on the symbolism an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National security and peace will be guaranteed when veterans' organizations are recognized and their activities are unrestricted. Along with veterans policies and systems, a country with well-established status of veterans organizations is recognized as an advanced country.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ar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South Korea also enter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July 2021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ensure that veterans' groups are properly recognized by the people, it is hoped that each veterans' group will make more efforts to be born as a veterans' group suitable for advanced countries.

Key Words: Veterans policy, Veterans Association, National Security, Veterans Affairs, Survey

붙임) 설문문항

공법보훈단체에 대한 인식과 역할제고 방안 설문지

공법보훈단체에 대한 인식과 공법보훈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서 공법보훈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집계되어 사용되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문의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자 : 문 근형, mhj6442@naver.com)

※ 다음은 공법보훈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으면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1. 귀하는 공법보훈단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 국내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14개의 공법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공법보훈단체 중에서 가장 활동이 뛰어난 단체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5개의 단체만 순서대로 기술한다면(번호로 기술)? 답변()

보 기
①광복회 ②대한민국상이군경회 ③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④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⑤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⑥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⑦4·19 민주혁명회 ⑧4·19 혁명희생자유족회 ⑨4·19 혁명공로자회 ⑩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⑪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⑫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⑬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⑭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문3. 공법보훈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 ④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4. 공법보훈단체들 간의 협력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문5. 공법보훈단체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6.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남북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공법보훈단체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7. 귀하는 공범보훈단체 중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8. 재향군인회의 안보활동에는 ① 북한 실체를 국민에게 잘 알게 하는 것

- ② 군조직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활동 ③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활동
- ④ 보훈단체와 연계한 활동 및 회원 친목활동 ⑤ 사회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중점을 두어야 할 순서를 기술한다면?

예) 1, 2, 3, 4, 5

답변)

문9. 재향군인회의 문8.에서 언급한 주요활동이 국가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10. 안보문제가 경제문제나 정치문제와 비교하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11. 다음항목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중 가장 큰
위협요소를 골라주십시오

- ① 안보(국방) 불안 ② 정치 불안 ③ 경제 불안
- ④ 자연재해 ⑤ 주변국가와의 관계

문12.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COVID-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박상증 *

- I. 코로나19 사태의 서막
 - II. 인간안보 개념의 진화
 - III. COVID-19의 인간안보 위협
 - IV.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논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국제적 협력이 붕괴된 원인을 분석하고, K-방역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한국은 COVID-19 발생 초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을 바탕으로 K-방역을 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보건 선진국은 초기방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2019년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에서 독성 변종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감염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의 연결성 및 개방성으로 확산속도가 빨라서 인간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백신의 개발여부와 구매능력, 방역체계 및 방역물질의 선진성 등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대응격차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회복과 공조체계의 건설적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K-방역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국격제고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정부도 보건안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여야 한다.

주제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K-방역체계, 인간안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I. 코로나19 사태의 서막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COVID-19, COronaVirus Disease-19) 확진자가 최초로 식별되고 2020년 1월 11일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늦장 대응으로 초기에는 중국 우환을 기점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국제적 전염병(Pandemic)으로 악화되었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COVID-19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xperience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포하고,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하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보건선진국들은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골든 타임(Gold Time)을 놓쳤다고 비난하고 있다. 다행히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덕택에 코로나19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어 2020년 12월 초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에서 독성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억 7,584만명이고 사망자도 약 38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백신은 약 21억 8,787만개가 투여되었다.¹⁾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의심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이 격돌하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긴장이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적·물적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으로 비전통적 안보영역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대만, 일본, 북한 등이 국경을 즉각폐쇄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문호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스, 메르스 등의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사태를 경험하면서 구축한 K-방역체계와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

1)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1. 6. 15.)

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통제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장기화, 백신 개발 소홀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현안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초기대응을 극찬하였으며, K-방역 체계, 진단키트와 의료물자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한국이 K-방역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보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K-방역에 따른 한국의 전문인력 파견과 양성교육 등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국격제고로 이어져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개선될 수 있다.

초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국경폐쇄, 책임공방, 마스크 및 의료제품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와해시켰다. 전통적으로 미국 등 서구 사회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하여 사태 초기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의심을 유지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은 냉전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병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안보의 우선순위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간안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비전통 안보개념이다. 또한 국제적 공조에 대한 인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초기에는 개별 국가 단위로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현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의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넘어 NGO,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국가이익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별국가의 상대적 이익보다는 국제적 공조의 결과를 반영한 절대 이익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국력을 고려할 때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하드파워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 등 소프트파워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인간안보 개념의 진화

탈냉전 이후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고 있으나, 테러, 감염병,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등에 의한 비전통적 안보 현안이 부상되면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간안보는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전통적 국가안보에서 강조하는 정치와 군사 분야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비군사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사회를 강타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기본권보장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개별국가의 국경봉쇄와 출입국통제, KF94 이상의 마스크와 전문의료기구 대량 확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 확보경쟁 등 국가안보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개방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인간안보는 전쟁의 공포와 사회경제적 결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안보는 개인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천부적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안보는 1980년대 후반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럽과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논의를 시작하였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개별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을 권위적으로 통치함으로써 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었다.¹⁾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확산되고 국가안보 중심의 전통적 안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였다.

인간안보가 한국에 소개된 시기는 2000년 초이다.²⁾ 현재 한국은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베트남 전쟁으로 초래된 라이파이한 문제, SNS를 통한 성적 문제, 환경문제 등 인간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 Suh, Bo-Hyuk, "The Role of State for Human Security: An Exploration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동북아연구 제2권 제2호, 조선대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 2012, p.75.

2) Ching, Alec Seung, "Securitization, Human Security, and South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Threats South Koreans Feel in Their Daily Lives", Culture and Politics vol.6 No3, p.47.

인간안보란 용어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뿐만 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강조하고 있다.³⁾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인권과 개인의 삶을 중요시한다. 인간안보의 대상은 국가안보 차원의 영토나 주권이 아니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와 안전 문제이다.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인간안보 분야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안보 등 7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⁵⁾

<표 1> 인간안보의 7대 분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② 식량안보(Food Security): 기아로부터의 자유 ③ 건강안보(Health Security):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오염된 물과 공기로부터의 자유 ⑤ 개인안보(Personal Security): 폭력과 범죄 등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⑥ 공동체안보(Community Security): 전통문화의 보존 ⑦ 정치안보(Political Security):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자유 등 |
|---|

3) Paul M. Evans,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10.
 4) 전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p.26.
 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4, p.22.

인간안보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등 개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천부적 권리의 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⁶⁾ 이를 위해 인간안보에서는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사회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개인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등의 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인간안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을 위해 대처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에도 활용되고 한다.⁷⁾ 대표적인 사례로 메르스·사스·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쓰나미 등 해일 또는 강진에 대한 지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시리아 내전, 미얀마 사태 등 내전으로부터 난민보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안보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자유와 인권보장, 개인에 대한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강조하고 있다.⁸⁾ 물론, 인간안보는 외세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전통적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도 않는다. 인간안보의 주요 위협의 유형은 ① 보건 및 사회, ② 자연 및 환경, ③ 정치 및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⁹⁾ 먼저, ‘보건 및 사회’ 유형에서는 감염병과 이민·난민 구분할 수 있다. 감염병의 주요 위협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치사율과 파급력에서 피해 규모와 범위의 증가, 사스·메르스·코로나19 등 각종 동식물로부터 전염되는 인수 감염병의 급격한 증가, 병원균 약용 생물의 무기화 가능성 등이 있다. 이민 및 난민 문제의 주요 위협은 국제사회의 이민자 급증¹⁰⁾,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고용환경의 악화, 감염병, 테러 발생 등 사회적 문제의 대폭 증가

6) Nam, Jae Sung, *"Human Security and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08, p.67.

7) Min-Soo Kim,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Human Security and Harmony between Notional Security"*, Ewha Law Journal, vol.21, no.1, 2016. 9, p.134.

8) Bajpai, Kanti, *"Human Security: Concept and Measurement"*, Kroc Institute Occasional Paper, 2000, p.48.

9) 정재홍, 비전통 안보의 다변화: 신종 감염병과 테러리즘 양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경쟁의 심화와 비전통 안보의 부상 세미나,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 및 세종연구소, 2020.11.10. p.55.

10)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국제 이민자 수는 약 2억 4,400만 명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국가안보 설문조사에서도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감염병이 16.9%로 평가되었다.¹¹⁾

둘째, ‘자연 및 환경’ 유형은 기후변화, 재해재난, 식량·에너지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요소는 지구 온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 대기오염 등 균형 파괴로 인한 폭염과 폭우 발생,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해안도시의 침수 또는 물 부족 사태로 지역분쟁의 유발 내지는 생태계의 파괴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재해재난의 주요 위협은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환경파괴 등으로 초래되는 재해재난의 급증,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막대한 피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식량·에너지 분야의 핵심 위협은 생산용지의 축소와 가격상승에 따른 식량위기의 증가,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연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심화, 식량·에너지 문제로 따른 개별국가의 분쟁 가능성의 증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및 기술’ 유형의 주요 현안은 사이버, 인공지능, 테러 분야이다. 사이버 위협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촉진과 디지털 기기의 확대로 사이버 공격의 취약성 대폭 증대, 고도화된 해킹공격으로 국가기간망의 불법점거, 개인과 기업정보의 탈취와 랜섬웨어 유포 등 사이버 공격유형 다변화 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위협으로는 첨단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의 대량양산, 악성코드 전파 등 불법행위의 증가, 킬러로봇의 개발 등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문제, 사회윤리적 문제 등의 발생 가능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테러 분야의 위협은 무인드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악성 테러수법의 고도화, 해킹·인터넷·가상화폐 등을 동원하여 합법과 불법을 위장한 테러지원의 다양화 및 은밀성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있다.

인간안보의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국가성, 잠재성, 불가측성, 연계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2020.10. p.40

* 북한의 군사적 위협 47.8%, 북한의 체제 불안 37.3%,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악화 23.0%, 주변국의 군비경쟁 18.6%, 감염병 16.9%, 세계경제 침체/경제 마찰 16.1%, 전 세계적 테러 위협 9.3%, 주변국 영토분쟁 4.3%

〈표 2〉 인간안보의 주요 특성

- ① 초국가성(Supranationality): 국경을 초월하여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국가별 개별대응보다는 지역 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효과적
- ② 잠재성(Potential): 평소에는 노출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으나 특정 시점에 발현하여 빠르고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신속 대응을 위한 경보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 * 사스·메르스·코로나19 감염병, 자살폭탄테러, 사이버 해킹 등
- ③ 불가측성(Unpredictability): 통상 잠재되어 있다가 각종 안보 이슈의 발생빈도의 양적 증가와 파급력, 영향력 등의 질적 증가로 심각한 수준의 안보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는 특성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이 요구
- ④ 연계성(Connectivity): 인간안보 현안이 개별적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전통적 군사안보를 기본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

III. COVID-19의 인간안보 위협

1. 생물학적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에 대해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177(2014.9.18.)과 유엔총회 결의안 69/1을 채택하여 유엔에볼라긴급미션(UNMEER, United Nations Mission for Ebola Emergency Response)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였다.¹²⁾ 유엔의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등 생물학적 재난(Biological Disaster)¹³⁾을 국제적 보건안보

12) 강선주, “바이오안보의 부상과 글로벌보건안보 구상,”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p. 1.

1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물학적 재난을 인간, 동물, 식물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와 팬데믹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 WHO, Health Emergency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Fact Sheets, 2017. <https://www.who.int/> (검색일: 2021.6.12.)

(Health Security)의 주요 이슈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생물학적 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실험실 사고, 테러, 전쟁 등의 형태로 발생되어 인류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생물학적 재난은 위협의 정도에 따라 ① 말라리아, 뎅기열, B형간염 등과 같은 풍토병(Endemic), ② 콜레라, 대장균 등과 같은 감염병, ③ 지카, 에볼라 등과 같은 감염병의 지역유행(Epidemic), ④ 페스트, 스페인독감, HIV/AIDS, H1N1, COVID-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대유행(Pandemic)¹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염병은 치명성과 집단발생 가능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1등급은 식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높은 수준의 격리가 요구된다. 주요 바이러스로는 에볼라, SARS, MERS, 라싸열, 페스트, 탄저,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다. 두 번째 2등급은 식별이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하다. 주요 바이러스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등이 있다. 세 번째, 3등급은 3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 격리는 불필요하다. 주요 바이러스로는 파상풍, B형간염,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 격리하지 않는다. 주요 바이러스로는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사회의 개방성 및 확장성과 연계하여 발생되고 있는 악성 신종 감염병은 ① 예측 불가능성, ② 지식과 정보의 한계, ③ 공포와 불안의 동시다발 전파, ④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 등의 특징이 있다.¹⁵⁾ 먼저 예측불가능성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현하고 어디로 확산될 지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다. 둘째, 지식과 정보의 한계 측면에서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은 전염경로, 특성, 통제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불확실하다. 셋째, 공포와 불안의 동시다발 전파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으나, 반대로 SNS 매체 등을 통해 가짜뉴스나 유언비어가 남발되어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은 세계화 현상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에 발병될 경우 국

14) Grennan D, "What Is a Pandemic?" *JAMA*. Vol 321. No.9 (March 2019)

15) 전개서, p.59.

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무역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위험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는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국가별 백신 확보의 격차 등으로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중국 우환을 의심하고 있어서 미중 갈등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는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리더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이므로,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2. 보건안보의 중요성 증대

오늘날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방성과 연결성이 확대되어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가 수월해 지면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환경파괴,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의 재등장,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병원균의 약물내성 형성, 세계화에 따른 식량과 생물 거래의 증가, 도시화, 인구이동의 편이성 등은 과거에 비해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회적 손실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미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J. 스티븐 모리슨과 애나 캐롤은 팬데믹 사태는 국가, 사회, 경제, 규범, 통치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¹⁶⁾

국제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One Health 개념¹⁷⁾을 적용하여 보건안보와 별개로 ‘인간-동물-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보건안보의 발전을 위해서는 One Health 개념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인간안보에 접목하여 국제적 협업체계를 구

16) 국제전략연구센터, 코비드-19, 미래를 재구성하다, 2020년 7월 28일

17) One Health 개념은 보건안보가 인간, 동물 및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인간 감염병의 60%가 동물매개, HIV, 에볼라, 인플루엔자 등이며 잠재적 생물 테러 물질의 80%가 동물매개 병원체에 해당된다.

축되어야 한다.

2014년 2월 국제사회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을 설립하였다. GHSA는 국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NGO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여 만든 국제기구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GHSA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¹⁸⁾

<표 3>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의 주요 활동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보건안보를 위해 WHO, BWC 및 유엔안보리결의안(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구축② 글로벌보건안보를 국가 지도자급 주요 의제로 격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생물감시(Biosurveillance)를 위한 국가전략서를 개발③ 보건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 |
|--|

GHSA는 국제보건기구가 국제조약이나 규약¹⁹⁾으로 대응하기 힘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사전에 이를 식별하여 공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촉매제(Accelerator)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²⁰⁾

IV.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1. 국제공조체계의 붕괴

COVID-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장기화되면서 WHO 등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중국의 책임회피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제보건기구의 소극적 지원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WHO의 예

18)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http://ghsagenda.org> (검색일: 2020.12.20)

19)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등

20) 강선주, 바이오안보(Biosecurity)와 보건외교(Health Diplomacy): GHSA 글로벌 보건 레짐 수립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과제, 2015.12.31.

측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적시적인 대응의 한계를 드러낸 보건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 1억 8,0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악성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등 심각한 생명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보건기구는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원인 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최초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보건안보에 대한 역량 차이와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대응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체계가 와해되어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²¹⁾ 특히 COVID-19에 대한 잘못된 정보 내지는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홍수처럼 생산되고 있어서 국제적 공조를 저해하고 있다. WHO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음모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치료법 등으로 국제적 공조체계가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통적 국가안보에 추가하여 이상 기후변화와 연계된 재해재난,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산업안보, 보건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영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는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국가산업정책을 포괄적 안보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발생되면서 국제사회의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²²⁾

인간안보는 과거 군사안보에 대한 부가적인 위협에서 평가절하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절벽에 봉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 등 기본적인 삶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에 따라, 인간안보는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변화와 감염병은 연관성이 매우 높다. 감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홍수, 기후 변동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방성의 급격한 확장과 이상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수공통감염병에 의한 지리적 감염영

21) 김원식, 코로나19 이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역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통권192호, 2020.6.3.

22) 박재완, COVID-19 사태와 국가안보, 원광대 안보논단 통권 560호, 2020.3.27.

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도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야생지역이 급격하게 잠식되고 있어서 '동물성 인수공통' 바이러스에 의한 보건안보의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참고로 가축 및 야생동물 바이러스의 60%가 인류 감염의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고, 신종 감염병의 75%가 동물에서부터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COVID-19 사태는 국제사회의 언론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흡수하고 있어서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5월 국제사회는 경제 쇠퇴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을 극적으로 감소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수치는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으로 COP26 세계기후회의도 연기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²³⁾ 바이러스에 의해 초래되는 보건안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책 이슈로 다루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연관성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 회복을 추진하여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구하고 있다.²⁴⁾

최근 들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이 새로운 주체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낮춰지고, 중앙정부의 책임과 의무에도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가 쇠퇴하면서 자유무역, 자본의 세계화, 국제 분업, 정치적 수단을 통한 시장 개방 등 경제자유주의의 한계도 식별되고 있다. 특히 이념 및 경제적 이익에 따른 동맹구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가치공유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기능주의의 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상호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세계주의 포기과 코로나19 팬데믹,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²⁵⁾ 등으로 민

23) COP26 세계기후회의는 2019년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며, 회의를 통해 196개국이 2015년 파리협정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가별로 새로운 탄소 배출량 감소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1520113285609>, 김 총리 '韓, '포용적 녹색회복' 탄소중립 실현 적극 선도할 것" (검색일: 2021.6.18.)

족주의 흐름이 강화되었다.²⁶⁾ 참고로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으로 과거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행히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와 세계주의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적 공조가 차츰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리쇼어링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국제협력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면서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2019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개시되었음에도 백신 수요에 대한 공급속도의 물리적 한계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악성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보건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WHO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도 신형 다극화 현상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²⁷⁾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된 국제질서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Governance)가 요구되고 있다.

2. 국제적 공조 회복을 위한 K-방역체계를 활용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안보의 회색지대가 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단기적으로는 파괴성,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휴 화이트 교수는 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해 백신을 국제적 공공재로 보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

25) 리쇼어링(Reshoring)의 동의어로는 온쇼어링(Onshoring), 인쇼어링(Inshoring), 백쇼어링(Backshoring) 등이 있다. (네이버 검색일: 2021.6.15.)

26) 전문가들은 현실주의 기반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한 패권경쟁 등으로 과거와 같은 형태의 회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하였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냉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① 미국우선주의와 ②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봉쇄주의적 성향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2020.6.29

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⁸⁾

한국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통한 축적된 대응 Know-how,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모범적인 참여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검사, 엄격한 접촉자 추적, 환자 격리 등 정교한 감염병 퇴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²⁹⁾ 또한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 카메라 영상,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을 포함한 5G 기반의 사회안전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감염 클러스터를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³⁰⁾ 최근에는 차관급 질병관리청을 신설하여 감염병 등 보건안보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함께,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공공장소 또는 외부활동 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나 검역을 방해하는 모두 행위에 대해 무관용정책과 최고의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성공적인 K-방역체계는 국제사회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유엔 연구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감염자의 확산 차단에서 미국 영국 등 보건선진국보다 약 2배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한국의 코로나19 초기대응이 국제적 모범 사례로 평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감염병 대응 know-how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협조가 쇄도하였다.³¹⁾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과정에서 활용한 3T 검사진단기법을 ‘K-방역모델(K-Quarantine Model)’로 체계화하고, 총 18종을 국제표준화로 추진하고 있다.³²⁾ K-방역모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검사·확진(Test), ② 역학·추적(Trace), ③ 격리·치료(Treat) 순으로 진행된다.

28) Ohm, Tae-am, Research Fellow Emeritus, KIDA, The Insights of the 2020 Seoul Defense Dialogue: Address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29)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국가경제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발원지인 중국의 출입을 폐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외국과 다르게 마스크 착용 반대 등의 시위가 일절 발생되지 않았다.

30) 차두현, ‘코로나 19’를 통해 본 ‘신안보’와 국제질서, 아산정책연구소, 2020.3.25.

31) 2020년 6월 5일 현재, 86개국에서 웨비나(Webinar), 화상회의 등을 통해 K-방역 체계에 대한 know-how를 공유하고 있다.

32) 관계부처 합동, 2020.6.11.,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표 4) K-방역 3T 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검사·확진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진단기법과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으로 구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Reverse transcript 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절차,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절차, 선별 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기준 등
역학·추적 (Tr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진단·격리관리와 역학추적 관리시스템으로 구분 모바일 자가진단앱(App)의 요구사항, 모바일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자가진단과 문진결과와 전자의무기록 연동방법,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방법 등
격리·치료 (Treat)	<p>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감염병 교차 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지침,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 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감염병 생활치료센터운영 표준모형,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 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평가, 증상에 따른 환자분류 및 병실 관리운영 지침,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재고·유통·물류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등</p>

COVID-19 팬데믹과 같은 보건안보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검증된 K-방역체계를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선정하여 국제 거버넌스(Governance)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유익한 방안이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제조기술을 활용하면 진단시약, 치료제, 백신 등 의료·보건 분야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제적 공급 서비스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최

근 들어 한국의 우수한 의료제조기술과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개발국가 간의 기술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여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악화, 백신 공급물량의 물리적 한계, 국가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리쇼어링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과 국제적 공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인간안보의 절대 위기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으로 인간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국제적 공급유통망을 교란시켰으며,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 공황과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각국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해결보다는 자국의 코로나19 감염 수준, 백신 확보 상황,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이동 및 집합 금지, 제제의 완화 및 해제까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와 엄격한 접촉자 추적, 환자 격리를 위해 5G 기반의 사회안전망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K-방역 체계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호평하고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한 주문이 쇄도하였다. K-방역체계는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현재 18종의 세부항목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로 연결된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 등 한 국가에서 발원된 사태는 주변국가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은 국제사회의 개방성과 연결성으로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감염병 팬데믹을 종결할 수도 없고, 특정 나라가 국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없다.

2021년 5월 21일 한국은 한미정상외교를 통해 1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다. 참고로 4월 16일 일본은 2,500만 명분의 백신을, 6월 6일 대만은 75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백신의 무기화’ 문제 내지는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개발과 공급의 촉진, 델타플러스 변이 등 악성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신규 백신 개발, 각국의 감염병 예방 know-how와 지식정보의 공유 등 국제적 공조체계의 복원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21.06.07]

[논문심사일 : 2021.06.19]

[논문수정일 : 2021.06.30]

[게재확정일 : 2021.09.1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2020.10.
- 강선주, 바이오안보(Biosecurity)와 보건외교(Health Diplomacy): GHSA 글로벌 보건 레짐 수립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과제, 2015.12.31.
- 강선주, “바이오안보의 부상과 글로벌보건안보 구상,”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 관계부처 합동,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020.6.11.
- 김원식, 코로나19 이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역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통권192호, 2020.6.3.
- 박재완, COVID-19 사태와 국가안보, 원광대학교 안보논단 통권 560호, 2020.3.27.
- 전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정재홍, 비전통 안보의 다변화: 신종 감염병과 테러리즘 양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경쟁의 심화와 비전통 안보의 부상 세미나,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 및 세종연구소, 2020.11.10.
- 조은정, 코로나19 확산과 유럽의 초국경적 보건안보 협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통권 제176호, 2020.3.12.
- 차두현, ‘코로나 19’를 통해 본 ‘新安보’와 국제질서, 아산정책연구소, 2020.3.25.
- Min-Soo Kim,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Human Security and Harmony between Notional Security", Ewha Law Journal, vol.21, no.1, 2016.9,
- Nam, Jae Sung, "Human Security and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08.
- Ohm, Tae-am, Research Fellow Emeritus, KIDA, The Insights of the 2020 Seoul Defense Dialogue: Address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2020.
- Paul M. Evans,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Suh, Bo-Hyuk, *The Role of State for Human Security: An Exploration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동북아연구 제2권 제2호, 조선대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 2012.

2. 국외문헌

Bajpai, Kanti, *"Human Security: Concept and Measurement"*, Kroc Institute Occasional Paper, 2000.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Ching, Alec Seung, *Securitization, Human Security, and South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Threats South Koreans Feel in Their Daily Lives*, Culture and Politics vol.6 No3. June 2019.

Grennan D, *"What Is a Pandemic?"* JAMA. Vol 321. No.9. March 201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4.

Young-Dahl Oh, *"Locke and Rousseau's Political Thought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6, No 4. December 2009

3.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합동대표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미국 고위급회의 참석, 2014.9.23. (검색일: 2021.4.19.)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http://ghsagenda.org> (검색일: 2021.4.20.)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1. 6. 7.)

WHO, *Health Emergency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Fact Sheets*, 2017.

<https://www.who.int/> (검색일: 2021.5.12.)

Abstract

A Study on the Recovery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overnance against COVID-19 Pandemic

Park, SangJung Ph.D.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collaps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seek way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the K-quarantin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outbreak, Republic of Korea(ROK) applied the K-quarantine system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the dedication of medical staff, and achieved the desired results. However, the many advanced Heal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US), United Kingdom(UK), and France suffered a lot of casualties and economic losses due to failure of their quarantine system.

Vaccination began at the end of 2019, but new virulent strains of the virus have occurred in the UK, South Africa, and India. Due to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and mental fatigue due to the COVID-19 case, the damage from infection is not decreas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s rapidly spreading in the connectivity and opennes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sing a serious threat to human security. In addition, the disparity in respons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deepening depending on whether vaccines are developed, purchasing capacity, and the advancement of quarantine systems and medical materials.

In conclusion, in order to quickly overcome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rust recovery and the constructive restoration of the collaboration governance system must precede. In this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address the K-quarantine model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utilize it to improve national prestige. ROK government also should develop realistic additional measures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for health security, and encourag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ctiv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NGOs

Key words: COVID-19 Pandemic, K-Quarantine Model, Human Security,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신 현 영 *
김 병 택 **

- I. 서 론
 - II. 한반도 안보환경과 항공모함 도입
 - III. 해군 전술항공통제 운용 및 분석
 - IV.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향
 - V. 결 론
-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e-mail: p3cshin@naver.com

**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 교리연구원, e-mail: kimbt90@gmail.com

논문요약

세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위협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현존하는 위협으로 우리는 전통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위협에도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힘의 우위 달성과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항공모함을 확보하려 한다. 항공모함 도입에 있어서, 탑재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항공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작전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공역 통제 능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향후 도입될 항공모함의 해양항공작전과 현재 운용 중인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의 상륙작전에 필수적인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확보를 위하여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먼저, 해군의 전술항공통제체계 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군의 전술항공통제체계 운영 자료, 군사교리 및 교범, 관련 부대 방문자료, 군사 분야에 대한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문헌 조사를 하였고, 상륙작전 및 해양항공작전 관련 실무경험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능력과 수준을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전술항공통제 운영의 조직과 인적 등의 구조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향은 조직적인 측면, 인적구성을 위한 편성,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해군 장교들의 전술항공통제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상위부서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전술항공통제, 해양항공작전, 상륙작전, 구조방정식 모형

I. 서론

세계의 안보환경은 전통적 안보위협¹⁾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테러,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²⁾ 확산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³⁾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어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국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은 증대되었으나 민족, 영토, 자원, 역사 및 도서영유권, 배타적경제수역⁴⁾ 및 조업·자원개발의 문제는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 함정·항공기 활동의 증가는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확장에 대비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활동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7광구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 등으로 갈등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을 추구하면서, 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대립에서 야기되는 안보위협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해군은 경항공모함을 2033년 전력화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⁵⁾이다. 경항공모함은 북한의 위협에 힘의 우위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이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환경에서 유사시 최소한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⁶⁾ 경항공모함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움직이는 해상항공기지를 이용한 북한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 1) 안보위협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국가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면 및 예상되는 위협을 의미한다.
- 2) 유엔결의 제2117호(2014. 9.)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선언하여 감염병이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들의 총칭이다.
- 4)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넘어서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그리고 공해방지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는 수역을 일컫는다.
- 5) 조선일보 홈페이지(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2/23, 검색일: 2021. 7. 5.)
- 6) Jacquelyn K. Davis, *Aircraft carriers and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National Security paper #13 of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New Hampshire Puritan Press Inc., 1993) p.vi.

을 보유하게 된다. 항모전투단은 적 지휘소, 핵 및 WMD 시설 등 핵심표적을 타격하고 조기에 해양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육상의 지원없이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다.

경항공모함 도입은 군 전력 운용능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체인저⁷⁾이다. 그러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운용에 따른 한국작전전구⁸⁾내에 기존의 전구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전구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모함의 전구 내의 항공전력 운용, 통제, 그리고 자체 방호능력 구비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해군의 전술항공 통제 능력 구비는 한반도 전구내의 독자적인 항공모함 운용을 위한 필요 능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 분석을 통해 해군에서 구비해야 할 조직 인적구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96년 대통령 재가로 시작된 항공모함 도입을 포함한 대양해군의 목표⁹⁾ 아래 추진되었던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구비의 구조적 제한점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¹⁰⁾을 통해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의 추진력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장으로 구성 된다. 2장에서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를 분석하여 전술항공통제의 조직 및 인적구성 등의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의 추진력 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향후 전술항공통제 발전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7)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뀌 놓을만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을 일컫는 말이다.

8) 한국작전전구(KTO: Korea Theater of Operations): 유엔사/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구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전투작전이 시행되는 구역. 한반도에 인접한 공해 및 공역 그리고 남북한의 영해, 영공 및 영토가 포함됨.

9) 박진성, “전쟁의 수준과 경항공모함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합참』, (서울: 합동참모본부, 2021), p.85.

10)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수군 간의 관계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II. 한반도 안보환경과 항공모함 도입

1. 한반도 안보환경

가. 한반도 안보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전 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테러 및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한 불특정 위협으로 인해 글로벌 안보지형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위협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향후 국제적 안보지형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¹¹⁾ 또한, 초국가적 위협¹²⁾이 국가의 안전과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대해 미래지향적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남중국해 등 이해관계 충돌지역에서 군사적 대립과 갈등으로 심화되면 양국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다른 지역 및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이러한 경험을 한 바가 있다. 대만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는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경쟁하에서 강대국 중심의 협력체 구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경제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를 보다 다층적인 방향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체인 QUAD¹³⁾의 참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QUAD+ 전략과 반민주주의 외교 등 새로운 전략적 환경 변화¹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미동맹하에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11)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10.

12) 초국가적 위협은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군사력 이외의 수단으로 국가를 초월해 야기하는 비군사적 위협의 한 형태로서, 탈 냉전 이후 강조되고 있는 위협임.

13)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이 아태지역 강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4자 안보대화정상회의를 일컫음.

14)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press, 2021), pp.8-10.

전략구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 군사 갈등과 충돌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는 군비 증강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공 침범 즉 중거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¹⁵⁾ 진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 역내 분쟁 발생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 및 러시아는 대북 방어 목적의 사드 배치 등에 대해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했고, 미국도 안보를 이유로 국제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와 경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일본의 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의 군사충돌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2018년에는 우리 구축함에 일본 해상초계기가 초근접 비행을 하는 등 충돌이 발생하였다.¹⁶⁾ 더불어 북핵 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의 지속으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거리의 삼각대립구도가 다시금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역내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 상호 교류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민족, 영토, 자원, 역사 등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영유권, 배타적경제수역 및 방공식별구역 획정, 조업 및 자원개발 문제가 국가간 갈등원인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실효적 지배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 함정·항공기의 서해상과 이어도 부근 활동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7광구 공동개발에 대한 한일간의 이견은 해양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다.¹⁷⁾

나. 북한 군사위협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의 비대칭전력인 핵과 WMD 개발과 더불어 재래식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북한의 권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신속히 이양되었으며, 이후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15)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안보 목적상 비행물체의 조기 식별을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 운영하는 공중식별구역을 말한다.

16)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7525.html#cb, 검색일: 2021. 7. 8.)

17) 대한민국 해군,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계룡: 해군, 2021), p.10.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천명하였으며, 핵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¹⁸⁾ 2017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9월 3일에는 수소폭탄 시험, 11월 29일에는 ICBM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잠재력을 과시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¹⁹⁾하였다. 2020년 10월 당 창설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²⁰⁾을 과시하는 등 핵 능력의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²¹⁾ 북한의 핵 위협은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리군은 피스아이가 로켓 항적을 식별했으며, 이후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세종대왕함이 로켓을 탐지해 궤도 추적을 하였다.²²⁾ 이와같이 우리 군은 적의 투발 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육상 통제 중심의 전구 공역 통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WMD에 대응할 수 있는 고정된 육상에서 통제하는 대응 수단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므로 기동이 자유롭고 위치 노출의 위협이 적은 해상 등에서 신속 은밀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구 공역통제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도입 될 항공모함은 적의 핵 및 WMD 시설 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인 발사체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전구 공역 통제를 통한 대응 수단을 포함한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모함의 전투력 투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항공통제 능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2. 항공모함 도입

가. 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

-
- 18) 공평원, “북한 핵/미사일 능력 및 운용전략, 그리고 우리의 대책”, 『북한 군사위협 평가 및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7), p.20.
 19) 프레시안 홈페이지(www.m.pressian.com/m/pages/articles/177790#ODKW, 검색일: 2021. 7. 5.)
 2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핵무기 운반수단은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폭격기가 있다. 이중 상대에게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운반체가 잠수함이다.
 21)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국방부, 2020), p.36.
 22) 서울경제 홈페이지(www.m.sedaily.com/m/pages/articles/011/0011790, 검색일: 2021. 8. 5.)

한국 전쟁시 우리 해군은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하여 작전을 펼친 함재 전투기의 활약과 위용을 직접 확인하였고,23) 이를 계기로 독자적인 항공기 및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열망을 키웠었다. 해군은 1951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군용항공기인 “해취호(海鷲號)”를 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군 항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해군항공은 ‘함대항공대’를 거쳐 ‘제6항공전단’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해상초계기24)와 해상작전헬기25)를 주축으로 조국 해양수호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조기 전쟁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26) 경항공모함이 지휘하는 항모전투단은 해양을 통한 접근 및 기동성을 이용하여 융통성있는 공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군의 고정기지 방어와 작전반경의 문제, 육군의 중심 타격능력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존성을 확보한 가운데 적의 측 후방에 대한 전력투사를 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항공모함은 상당한 항공 강습타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병대, 공군 및 육군자산을 통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 전방 전개 임무 및 전시에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합동작전의 결정체이다. 이라크전 등 주요 전쟁에서 항공전력을 사용한 공중선제기습 공격, 항공력에 의한 적 중심 타격 등의 항공작전이 전장을 주도하고 있다.27) 이라크전은 육상기지의 위협이 거의 없는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전력의 우세 속에서 치러진 전쟁이었다.28) 전장의 중심이 짧은 우리 전장 환경에서는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및 특수부대를 포함한 비정규전 세력을 고려할때 상대적으로 기동이 자유로운 항공모함의 운용으로 지상군과 공군과의 합동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합동전력자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김인승,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과 6.25 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서울: 국방부, 2019), p.121.
 24) 해상초계기는 해군의 해상전력으로 운용되는 고정익항공기. 광범위한 해역에서 전천후 대잠전, 대함전, 전자전, 기뢰전 등 복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25) 해상작전헬기는 해군의 해상전력으로 운용되는 회전익항공기. 대함작전과 대잠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며, 대침투작전, 초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26) 대한민국 해군,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 (계룡: 해군, 2021), p.22.
 27) 이라크 전쟁에서 항공력 운영소티는 총 41,404 소티였다.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 전쟁: 항공작전을 중심으로 분석』 (계룡: 공군전투발전단, 2003). 참조
 28) 우정훈, “공중우세와 전쟁의 양상-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대전: 공군대학, 2003), p.12.

항공모함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자산이다.²⁹⁾ 해양 주권 보호는 자국을 위한 자유로운 바다의 사용과 타국에 대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해양통제를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다. 해양통제는 광대한 해양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에, 제한된 해역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국의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국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개념이다. 해양통제는 수상·수중·공중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나, 이 중에서도 공중우세는 우군세력을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전장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해양주권 수호의 해양통제를 위한 항공모함의 위력은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의 대략 2~6배의 해양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³⁰⁾ 항공모함은 2011년 제미니호 피랍사건과 2011년 및 2014년 리비아 교민 철수와 같은 해외동포 이송작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대외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수단이다.

나. 항공모함과 해군 전술항공통제

2021년 6월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을 취역 시, 해군참모총장은 ‘마라도함은 합동전력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항공모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³¹⁾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과의 마찰에 따른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WMD 뿐만 아니라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힘의 우위에 비대칭적인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북한 위협에 힘의 우위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고 핵·WMD 시설 및 군지휘부 타격을 위해 지상 전구통제체계와 더불어 항모전투단의 독자적인 전구 전술항공통제능력이 필요하다. 항공모함의 압도적인 전력은 전술항공통제를 통한 항모전투단 현시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주변 강대국과의 군사력 비교는 <그림 1>에서 나

29) 대한민국 해군,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 (계룡: 해군, 2021), p.24.

30) T. J. Mckearney, "Their Carrier Battle Group",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nnapolis MD: December 1982), p.79.

31) 연합뉴스 홈페이지(www.m.yna.co.kr/view/AKR20210628022700504?section, 검색일: 2021. 7. 5.)

타난 바와 같다. 중국은 2012년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였으며, 첫 자국 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취역하여 현재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49년까지 핵 추진 대형항공모함을 포함한 10여 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수상함 51척을 중심으로 한 4개의 호위대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이즈모급 대형 호위함 2척을 수직이착륙 고정익 전투기 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으로 2023년에 작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³²⁾ 미국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의 자유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역내 미군 주둔확대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포함한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다. 러시아는 군 구조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국방력 건설에 매진해 왔다. 2018년부터 보라이급 핵 잠수함 건조 등 핵 역지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은 1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대와 군관구 간의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연합작전으로 연합해상 작전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 주변국 군사력 비교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12.

32) 대한민국 해군,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 (계룡: 해군, 2021), p.14.

항모전투단은 주변국 대응에 최소한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건설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해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국가 번영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해상올타리가 필요하다. 항모전투단의 기동성과 탑재된 항공전력의 작전범위를 고려한다면 아무리 주변국의 강력한 군사력이라도 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이다.³³⁾

항모전투단에 있어 핵심은 전투기와 해상작전헬기 및 다양한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있다. 해상항공기로서 항공모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항공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항공기들과 무기체계 등으로 인한 복잡한 공역에서 성공적인 작전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역통제가 선결요건인 것이다. 공역통제는 해당 공역에서 공역사용자 간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도모하게 한다. 항공모함 도입 추진과 더불어 작전환경에 맞는 공역통제의 개념과 절차 확립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환경에서 해양으로부터 전력을 투사하는 해양작전의 중요성과 그 전략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 해양에서의 항공모함 도입과 더불어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운용이 크게 확대되므로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Ⅲ. 해군 전술항공통제 운용 및 분석

이 장에서는 해군 전술항공통제의 발전을 위하여 해군에서 운용 중인 전술항공통제체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술항공통제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해군 전술항공통제에 관한 학술적인 저술사례는 해군항공이라는 특정 사안에 관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와 능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론적 근거 없이 작전적 측면에서 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술항공통제 관련 학술적인 연구는 이재호³⁴⁾가 해병

33) 박진성, “전쟁의 수준과 경항공모함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합참』, (서울: 합동참모본부, 2021), pp.73-83.

대 항공전술통제와 관련한 제한적인 항공통제기구 운영방안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병대 항공전술통제 관련 연구의 제한점과 기타 작전적 수준의 보고서 형태의 연구를 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전술전술항공통제체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의 연구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과 관련 있는 미국 전술항공통제체계 관련 자료, 국내·외 상위 개념, 군사교리 및 교범,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관련 부대 방문자료, 군사 분야에 대한 인터넷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문헌 조사 방법을 적용하였고, 상륙작전 및 해양항공작전 관련 다년간 실무경험 등을 반영하였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위협, 주변국 정세와 경항공모함 도입 등과 미군의 전술항공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현재 상륙작전과 미래 해양작전환경에 대비한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능력과 수준을 SWOT 분석³⁵⁾을 통해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1. 미국 해군 전술항공통제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분야를 살펴보기 전에 항공모함을 100여년 운용하여 독자적인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보유한 미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알아보았다. 미국 해군은 해상과 해안으로 구분되는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와 해병대 전술항공통제체계를 운용한다. 미 해군의 전술항공통제전대는 계획수립, 연습, 작전 등의 목적에 따라 운용한다.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전술항공통제전대 예하의 전술항공통제대대(TACRON: Tactical Air Control Squadron)에 의해 운용된다. 미 해군 전술항공통제대대의 주요 임무는 해군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용요원의 모부대로서 전비태세 유지기능을 수행하고, 해군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용요원을 함정에 파견하는 역할을 하며, 해양작전 시에는 항공통제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비태세를 유지한다. 전술항공통제본부는 해양작전기동부대의 항공 참모조직으로 항공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작전지역 내의 모든 항공작전을 계획·조정 및 통제하고, 평시에는 교육·훈련 등 전비태세 유지가 주 임무이고, 전시에는 함정에 탑재하여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편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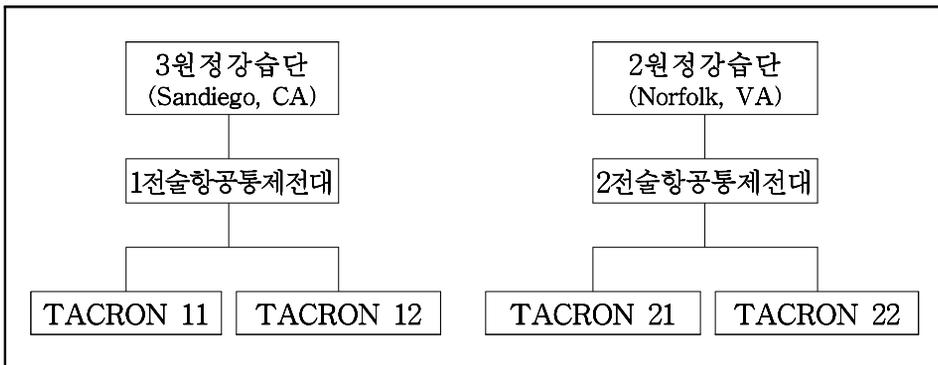
34) 이재호, “해병대 항공통제기구 운용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연구보고서, (2015).

35) SWOT 분석은 조직의 내부 및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기법이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조직은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개 전술항공통제전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전대 예하에는 2개 전술항공통제대대가 편성되어 있다.

미 해군 전술항공통제대대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통상 3개의 파견대를 운용하며, 임무 지시에 따라 항공모함, 대형수송함, 병원선 등에 약 30명 규모의 해군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 파견대의 지휘관은 항공강습단 항공자산조정관, 항공참모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 예하에는 다양한 회전익·고정익 항공기 및 전방항공통제관의 장교로 구성되며 부사관은 항공관제사, 요격관제사, 비행현황 담당과 기타 통신업무를 지원하는 요원으로 편성된다.

<그림 2> 미국 해군 전술항공통제 조직



출처 : 해군본부, 미국전술도서, 『대규모 상륙항공통제전술』(계룡: 해군본부, 2011), p.1-7.

미 해군은 단일 전술항공통제본부로는 해양작전과 관련된 다른 모든 항공통제 책임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항공통제가 어려움을 인지하여 관제사의 숙련도 향상과 항공지원 임무에 대한 훈련 등을 통해 전술항공통제체계를 발전시켰다. 대형함정에는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편성하고, 기타 지원함정에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들의 직접통제 할 수 있도록 전술항공통제대대를 파견하고, 전술항공통제대대가 일반적인 항공통제와 관련된 모든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³⁶⁾ 이처럼 해양작전에서 항공력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맞추어 항공통제의 능력도 발

전하고 있다.

2.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 실태 및 SWOT 분석

해양작전 수행에 있어서 작전부대의 항공통제능력과 항공전력 규모, 운용부대의 작전 수행능력이 필수요소이다. 전구 항공통제체계는 지상작전을 위주로 수행하는 항공통제체계로써 해양작전시 미 해군에서 운용하는 전술항공통제체계와는 차이점이 있다. 해양작전에서 항공작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해양작전에서의 독자적인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는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 해군은 항공통제기구를 운용하지 않고, 공군의 전구항공통제체계를 중심으로 상륙훈련시에만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에서 임시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운용하고 있다. 때 훈련시 비행대대 소속 항공장교, 기지별 관제사 등을 파견받아 임시로 운용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해군의 전술항공통제체계를 SWOT 분석하면 <표 1>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1>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 SWOT 분석

구분	주요내용
강점(Strength)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영 기반 구축 및 운용 노하우
약점(Weakness)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 전담 조직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기회(Opportunity)	신규 전력 건설 도입에 따른 전담조직 필요성 증가 독자적인 해상공역통제 수행능력 필요
위협(Threat)	북한의 군사위협 및 주변국 잠재적 갈등요인

우리 해군의 강점(Strength)은 2008년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을 전력화한 이후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해양훈련 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였다는 것이다. 독도함 건조시 기동부대 지휘소 한편에 해군 전술항공통제본부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하드웨어적인 운용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함상 이착륙 수행을 위

36) 해군본부, 미국전술도서, 『대규모 상륙항공통제전술』 (계통:해군본부, 2011), p.1-2.

한 항공장교, 관제사 등이 편승되어 운용 중에 있다. 연습시에도 전술항공통제 관련 인원을 파견받아 전술항공통제본부를 구성하여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약점(Weakness)은 다음과 같다. 해군은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다. 따라서 훈련시 파견 요원으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한하게 된다. 교리 분야도 비행대대 또는 상륙전대에 임무가 부여되어 미군 교리를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약점은 해군 전술항공통제부대의 운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점이다. 해군은 대규모 항공부대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므로 조직 운영 및 규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2008년에 전작권 전환 추진과제로 추진되었던 ‘한국 해군 전술항공통제대 창설’이 2018년 국방개혁의 영향으로 과제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 부대창설을 위한 추진 동력이 저하되어 있다.³⁷⁾

외부적 기회(Opportunity)는 신규전력 도입에 따른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이 2021년 6월에 취역하여 전력화 중이고, 2033년을 목표로 경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수송함 운영과 항공모함 도입에 따른 독자적인 해양작전을 위한 전구 전술항공통제본부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사단급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의 추진과제로써 상륙작전시 항공작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시 효율적인 전술항공통제체계가 필요한 점도 기회이다. 제한된 공역 내에서 다양한 항공자산과 작전 수행을 위한 해군 전술항공통제본부는 확보되어야 한다.

위협(Threat) 요인은 북한의 군사위협이다. 북한의 핵과 WMD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우리의 해양의존도를 고려한다면 해양에서 갈등을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해양에서의 항공작전은 필수이다. 우리 군은 국익과 직결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대양에서 전력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의 항공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과제이다.

37)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55.

3. 해군 전술항공통제체계 운용

해군의 전술항공통제의 조직·인력 등의 운용 방향은 아래와 같다. 전술항공 통제대대는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운용하기 위해 교리 및 전술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전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형상륙함 및 향후 경항공모함 등에 구성될 전술항공통제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술항공통제본부는 해양기동부대의 항공참모 조직으로써 해양작전 간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며, 작전구역 내의 모든 항공작전을 계획·조정·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차기 경항공모함·대형수송함 및 다양한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술항공통제대대급 규모의 부대가 필요하다. 2021년 후반기에 전력화되는 마라도함 및 차기 경항공모함 사업과 연계하여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이는 전술항공통제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임무는 기동부대작전, 상륙작전, 해상대침투전시 해상항공지원작전본부³⁸⁾ 임무 수행, 재해·재난시 인도주의적 작전 등 해양항공작전 전 영역에서 항공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와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술항공통제대대는 전술항공통제본부 편성에 대비하여 전비태세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상시 파견대를 운용하여 연합·합동상륙훈련 간 전술항공통제본부 편성, 인도주의적 작전 등 필요시 합동탑재뿐만 아니라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용절차 및 항공기, 공역 통제 교리 발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대형수송함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술항공통제대대급 부대를 시작으로 중기적으로는 인원 증원, 장기적으로는 경항공모함 도입에 맞추어 전술항공통제대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인력운영 측면에서 전술항공통제대 운용에 필요한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대대보다 작은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평시 전비태세의 확립과 전술항공통제 관련 계획 및 항공작전을 조정통제하는 조직

38) 해상항공지원작전본부 (MASOC: 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는 해상 대특작부대 작전시 고밀도공역통제구역 내 대공방어와 항공작전을 주관하는 기구를 일컫는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논산:합참, 2020), p.401. 참조.

을 운영해야 한다. 전술항공통제대 예하에는 계획지원반 등 5개반을 운영한다. 계획운영반은 항공분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교통통제반은 전술항공통제본부 교리 발전 및 증원요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항공지원통제반은 항공화력지원 분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방공협조반은 전문 항공요격통제관을 활용하여 방공분야 계획을 수립하고 헬기협조반은 각종 작전·훈련에 참가하여 항공통제 등 전술항공통제본부 운용 절차를 숙달한다.

세 번째로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체계의 정립이다. 해군의 전술항공통제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해양과 함정에서 항공통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교리와 작전개념을 숙지해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형수송함 운용과 미래 경항공모함 도입에 선행하여 전술항공통제 요원의 양성 및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군의 기초 교육과정과 공군의 공지합동작전학교³⁹⁾의 합동최종공격통제관⁴⁰⁾을 양성하는 교육 외에 전술항공통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체계는 없다. 따라서, 미군의 대형수송함 운용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료와 노하우의 축적과 더불어, 전술항공통제 관련 전문 연구·교육기관의 신설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증가되는 교육소요 반영이 필요하다. 방공협조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공군의 합동최종공격통제관 양성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실전적인 전투훈련을 위한 교육·훈련의 환경 구축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전장환경에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시설을 갖추면,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군의 전술항공통제능력 향상에 대해 조직적인 측면, 인적구성을 위한 편성방안,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등 세가지 부분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전력도입 상황과 국제적 안보정세 등을 고려시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해군 전술항공통제의 전구

39) 공지합동작전학교 (AGOS: Air to Ground Joint Operations School)는 지해상에서 연합·합동 항공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합동최종공격통제관 등을 교육하는 기관임.

40) 합동최종공격통제관 (JTAC: 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은 근접항공지원 작전과 항공 우주작전을 지상에서 통제하며 최종공격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요원임.

항공통제 능력은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

IV.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향

해군 전술항공통제는 향후 항공모함 운영에 필수적이며, 현재 상륙작전에 운용되는 대형수송함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해군은 대양해군의 기치 아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양항공작전에 필수적인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의 도입과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전술항공통제 능력 확보는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이 장에서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요인이 구조적으로 연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조직에 적합한 능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인에 대한 추진력을 향상시켜야 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방향은 구조적인 요인을 밝혀내어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모형과 잠재변수가 관찰변수로 측정되는 측정모형이 결합된 형태으로써 현상을 분석한다. 모형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진행하여 현상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며, 모형을 설정 후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표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한다.⁴¹⁾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제한된 인원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이를 분석하여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응집력을 나타내는 충성도⁴²⁾를 산출하여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연구모형

공학적인 모형 연구에서는 사회적 현상 연구를 위하여 현상의 원인부터 결

41) Afifi, A.A., *Computer-Aided Multivariate Analysi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0), p.57-89.

42) 충성도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조직에 대한 태도 및 행동으로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는 개인의 중심적인 생각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내부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과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마케팅 연구 영역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바고찌(Bagozzi)가 “Causal Models Marketing”을 통하여 구조방정식을 발전시켰다.⁴³⁾ 국내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조직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였는데 이훈구⁴⁴⁾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조직의 역할의 책임 요소로 지휘능력, 역할, 규정과 응집력을 나타내는 충성도로 구분하여 조직발전 연구를 하였다. 조직에 대한 연구는 울콕(Woolcock)이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사회 네트워크가 특정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관계성을 근거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이런 점들이 조직체의 충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설문 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또한, 설문 조사는 정책적 결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위하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⁴⁶⁾ 구조방정식 모형은 비 실험적인 상황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주는 통계적 기법이다.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모형과 잠재변수가 관찰변수로 측정되는 측정모형이 결합된 형태가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먼저 선행이론에 근거하거나 현상에 대한 통찰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선행연구에 관하여 영국 통계청에서 모형 분석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상인원에 대한 적절한 모형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인원을 통한 자료 모형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⁷⁾ 구조방정식에는 모수 추정 방법으로 대표본 이론을 따르는 최대가능법과 샘플 수가 적게 제한되는 표본에 사용되는 부분최소평방법(PLS)⁴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연구하여, 연구 진행에 유용한

43) R.P. Bagozzi, *Causal Models in Marke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pp.28-30.

44) 이훈구, *Psychologist's perspective on the labor market*, (서울: 범문사, 2000), pp.52-59.

45) M. Woolcock,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998), pp.151-208.

46) S. Negash, T. Ryan, and M. Igarria, *Quality and effectiveness in Web-based customer support systems*, *Information & Management, Volume 40*, (2003), pp.757-768.

47) Eurostat, *Assessment of the quality in statistics, Item 4. of the agenda, Definition of quality in statistics*, (2000). pp.274-280.

48) 부분최소평방법(PLS: Partial Least Square)은 제한된 인원에 대한 현상 연구시

부분최소평방법(PLS)을 사용하여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 방안연구를 하고자 한다.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 방안을 위한 위관 장교 및 소령 장교들을 중심으로 충성도 연구를 하였다.

〈표 3〉 구조방정식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화정적 요인분석	크론바알파 테스트
전술항공통제 조직관리	조직 편성의 적절성	0.775	0.72
	조직 편성에 따른 보직관리 정도	0.762	
전술항공통제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의 인지도	0.617	0.854
	인력운영의 상위부서와 협조정도	0.613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기	0.584	
	인력운영의 적절성	0.545	
전술항공통제 운영관리	부대 운영계획 수립시기	0.698	0.812
	부대 운영관리 적절성	0.685	
	부대 교육훈련계획 수립 인지도	0.674	
	부대 운영관련 상위부서 협조정도	0.648	
전술항공통제 전력사업 결과	항공통제 사업의 전력발전 기여도	0.612	0.763
	수상·수중 사업대비 전력발전 정도	0.596	
	항공사업과 전력발전방향 일치도	0.515	
충성도	전술항공통제사업 관심도	0.885	0.85
	전술항공통제전력발전방향 충성도	0.839	
	전술항공통제전력사업방향 인지도	0.787	

본 연구에서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에 대한 충성도를 해군 항공통제 조직 발전에 대한 관심도, 해군 전술통제 운영 발전에 대한 인지도를 포함한 장교들의 중심적인 관점이 충성도로 표현되도록 모형을 연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을 위한 잠재변수로는 크게 리더십과 3장에서 분석되어 제시되었던 전술항공통제 조직관리, 전술항공통제 인적자원관리, 전술항공통제 운영관리, 그리고 충성도 산출에 필요한 전술항공통제 관련 전력사업 실행결과로 정하였다. 또한, 잠재변수를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변수는 20가지로 정하였으며 잠재변수의 하나인 인적자원관리는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기, 인력운영

주요 인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학적인 방법임.

의 적절성, 인력운용의 인지도, 인력운영의 상위부서와의 협조 정도로 나타냈다. 잠재변수 5가지에 대한 측정변수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모형 분석의 시작은 설문조사를 위한 모형의 가설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장에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구조방정식 설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사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변수(설문변수) 및 요인변수(잠재변수)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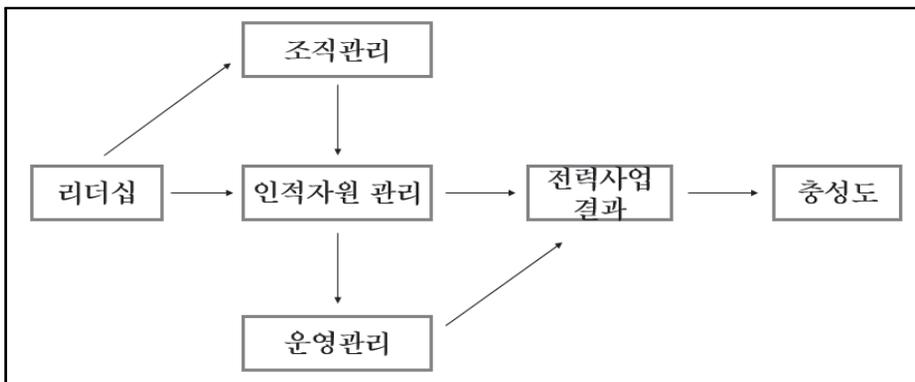
가. 가설 1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의 충성도에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나. 가설 2 : 전력사업 및 운영관리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의 충성도 향상에 중기적인 간접 영향을 줄 것이다.

다. 가설 3 :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는 계급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토대로, <표 3>에 나타난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림 4>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관련 모형



모형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가설 검증이다. 설정된 모형의 가설은 설문조사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앞에서 설정한 가설 3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군 항공장교들을 대상으로 측정변수 관점에서 충성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7점 리커트척도⁴⁹⁾로 계급별(중소위, 대위, 소령)로 구분하여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과 인원의 제한으로 부분최소평방법(PLS)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대상은 계룡 및 포항지역에 근무하는 해군항공장교들을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설문 응답자 중 7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얻었다. 데이터 특성을 보면 계급별 중·소위는 30%, 대위 30%, 소령 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군 항공장교의 인원구성비와 정책관련 인지도를 고려한 적절한 분포로 볼 수 있다.

계급별 검증은 잠재변수와 해당 각 측정변수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의 유의성은 확증적 요인분석⁵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앞의 절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또한, 관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 알파 테스트⁵¹⁾를 실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신뢰도 0.7 이상을 나타내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가 유효한 것으로 확증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유효한 데이터를 이용한 관계의 유의성 검증에서 계급별 검증 값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 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신뢰도 검증결과를 통해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해 각 경로값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은 붓스트랩(Bootstrap)⁵²⁾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별 95% 붓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다음 <표 4>와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49) 리커트척도(Likert Scale)는 '총화평정척도(Summated Rating Scale)'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대표적인 응답자를 중심으로 척도화 방법과 서열척도로 질문은 사실에 관한 판단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묻는 것을 나타낸다.

50)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미 결정된 구조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51) 크론바 알파 테스트(Cronbach Alpha Test)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알파 계수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있다고 본다.

52)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은 신뢰구간 추정, 검증을 위한 p-값과 임계치 계산, 추정량의 표준오차 측정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표 4〉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에 대한 95% بوت스트랩 신뢰구간

잠재변수			최저점	경로계수	최고점
조직관리	→	인적자원관리	0.512	0.667	0.767
인적자원관리	→	운영관리	0.524	0.631	0.736
		전력사업 결과	0.069	0.369	0.572
운영관리	→	전력사업 결과	0.436	0.568	0.721
전력사업결과	→	충성도	0.091	0.221	0.435

〈표 4〉는 잠재변수들간의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장교들의 전술항공통제 향상을 위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위의 전 요인들의 경로계수가 양수로 나타남으로써 하나의 요인이 향상되면 다른 요인도 같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장교들의 리더십, 조직관리, 인적관리, 운영관리, 그리고 전력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로 나타나는 참여도가 향상되면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의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가 향상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 중 다음 단계는 각 요인 간의 효과분석이다. 이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향상을 위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 비교를 통해 효과분석을 나타낼 수 있다. 효과분석에서는 각 요인이 충성도에 주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산출하였다. 효과분석 중 직접효과는 원인 요인과 결과요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해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간접효과는 원인변수가 하나 이상의 다른 요인들을 거쳐 결과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의 총합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로 나타낸다. 각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잠재변수와 충성도 관계

잠재변수	→	측정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리더십	→	충성도	-	0.067	0.067
조직관리			-	0.136	0.136
인적자원관리			-	0.116	0.116
운영관리				0.121	0.121
전력사업결과			0.215		0.215

각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리해 보면 잠재변수와 충성도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있으며, 잠재변수들과의 총 효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력사업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관리 분야는 간접적으로 충성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효과측정결과 효과 수치가 유효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가설 1, 2를 만족하는 것이며, 이는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발전에 대한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충성도 분석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향 모형 분석결과 가설 1~2의 유의성은 검증되었다. 가설의 유의성 입증 이후, 이 절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해군 전술항공통제 관련 충성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충성도 분석을 위한 충성도 지수 산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잠재변수를 지수화한 연구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국가품질연구소에서 제시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지수의 모형화를 통하여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⁵³⁾ 미국 소비자 충성도 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건 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모형화한 후 소비자 충성도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충성도 지수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해군 전술항공통제 관련 충성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충성도 결과를 나타내

53) C. Fornell,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56 (1992), pp.6-21.

는 충성도 지수는 <표 6>와 같다.

<표 6> 해군 전술항공통제 운영 충성도 산출 결과

구분		응답횟수	Loyalty Index
계급	전체	70	69.8
	소령	40	71.72
	대위	30	68.24
	중·소위	30	67.20

<표 7> 계급별 충성도 향상 점검표

잠재변수	측정 변수	소령	대위	중·소위
전술항공통제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기	√	√	√
	인력운영의 적절성	√		√
	인력운영의 인지도		√	√
	인력운영계획의 향후 상위부서 협조			√
전술항공통제 조직관리	조직 편성의 적절성	√		√
	조직편성에 따른 보직관리정도		√	√
전술항공통제 운영관리	부대 운영계획 수립시기	√		√
	부대 운영관리 적절성	√	√	√
	부대 교육훈련계획 수립 인지도			√
	부대 운영계획관련 상위부서 협조	√		√
전술항공통제 전력사업 결과	항공통제 사업의 전력발전 기여도	√	√	√
	수상·수중 사업대비 전력발전 정도		√	√
	항공사업과의 전력발전 방향 일치도		√	√
충성도	전술항공통제사업 관심도		√	√
	해군 항공전력발전 방향 충성도			√
	전술항공통제 전력사업 방향 인지도	√	√	√

충성도는 잠재변수에 대해 측정변수들의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것이다. 전체적인 충성도는 69.8로 산출되었으며, 이로써 충성도의 유의성이 확증되어 가설은 검증되었다. 충성도를 100점 기준으로 볼 때 장교들은 해군 전술항공통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령들의 충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술항공통제 관련 이해도와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위관 장교로 갈수록 충성도가 낮은 것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충성도 지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요인 간의 관계와 계급별로 충성도를 구한 것이므로, 전술항공통제 관련 충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성도 향상 점검표 산출 결과는 <표 7>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7>의 결과는 충성도 향상을 위해 군 또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충성도지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충성도 향상을 위해서는 측정변수에서 나타난 거의 전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위 그룹에서 충성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이 중·소위 그룹에서는 전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위 그룹에서는 전술항공통제 전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재고 등을 포함한 충성도를 높일 지원이 요구된다. 소령 그룹에서는 인적자원관리와 전술항공통제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및 운영관리에 대한 영관장교의 제도적 개선 요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관장교의 관심도와 인지도로 표현되는 충성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살펴본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해군 항공장교들의 충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해군 전술항공통제 발전 방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세 그룹의 충성도를 비교함으로써 전술항공통제 운영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조직, 인적자원, 운영관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개선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소령 그룹에서는 개선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인적자원 및 운영관리 요인, 대위 그룹장교에서는 중기적으로 전력사업 실행요인, 중·소위 그룹에서는 장기적으로 인력운영계획 및

부대운영계획의 인적자원과 운영관리 요인, 중기적으로 조직관리 요인에 대한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항공장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V. 결 언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항공모함 도입에 있어 핵심은 항공기 운용에 있다. 해상항공기지의 항공기 전술통제 능력 구비는 경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다.

본 논문은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살펴보고, 미군의 전술항공통제체계를 바탕으로 해군의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인적 차원의 발전 방향을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위관급 및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해군 항공장교의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을 조직, 인적자원, 운영관리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기법의 하나인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을 위해 해군 항공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해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성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술항공통제 전력사업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충성도 개선을 위하여 발전 방향을 산출한 결과 소령 그룹에서는 인적자원 및 운영관리 요인, 대위 그룹장교에서는 전력사업 실행요인, 중·소위 그룹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운영관리 요인과 조직관리 요인들이 추진력 발전을 위한 충성도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산출한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에 대한 추진력 발전 방향 지수는 해군 항공장교들의 전술항공통제체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전술항공통제 능력 향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전술항공통제 인력활용 방안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성과는 전술항공통제능력 향상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인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전 방향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전술항공통제체계 발전에 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발전을 위해서 관련 담당자 즉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 항공장교들에 의해 제시되는 발전 방향과 기존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해군 전술항공통제 능력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21.08.02]

[논문심사일 : 2021.08.16]

[논문수정일 : 2021.08.27]

[게재확정일 : 2021.09.13]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공평원, “북한 핵/미사일 능력 및 운용전략, 그리고 우리의 대책”, 『북한 군사위협 평가 및 한국의 대응전략』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7.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 김인승,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과 6.25 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국방 정책연구』제35권 제4호, 서울: 국방부, 2019.
- 대한민국 해군,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계룡: 해군본부, 2021
- 박진성, “전쟁의 수준과 경항공모함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합참』, 서울: 합동참모본부, 2021, pp.73-85.
- 송주영·송태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서울: 황소걸음 아카데미, 2019.
- 우정훈, “공중우세와 전쟁의 양상-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대전: 공군대 학, 2003, p.12.
- 이재호, “해병대 항공통제기구 운용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연구보고서, 2015.
- 이훈구, *Psychologist's perspective on the labor market*. 서울: 법문사, 2000, pp.52-59.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0『합동작전』논산: 합동참모본부, 2015.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19『합동공역통제』논산: 합동참모본부, 2016.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0-2『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논산: 합동참모본부, 2020.
-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전쟁: 항공작전 중심으로 분석』계룡: 공군전투발전단, 2003.
- 공군본부, 공군참고교범 1『군사용어사전』계룡: 공군본부, 2013.
- 해군본부, 해군세부운용교범 3-6-402『해군공역통제』계룡: 해군본부, 2019.
- 해군본부, 해군세부운용교범 3-3-102『상륙작전시 항공운용』계룡: 해군본부, 2017.
- 해군본부, 미국전술도서『대규모 상륙항공통제전술』계룡: 해군본부, 2011.
- 해군본부,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계룡: 해군본부, 2021.

2. 국외문헌

Afifi, A.A., *Computer-Aided Multivariate Analysi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USA, 1990, pp.57-89.

Bagozzi, R. P., *Causal Models in Market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USA, 1980, pp.28-30.

Davis, Jacquelyn K., *Aircraft carriers and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National Security paper #13 of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New Hampshire: Puritan Press Inc, 1993, p.vi.

Fornell, C.,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1992, pp.6-21.

Eurostat, *Assessment of the quality in statistics, Item 4. of the agenda, Definition of quality in statistics*, 2000, pp.274-280.

Mckearney, T. J., "Their Carrier Battle Group",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nnapolis MD, 1982, p.79.

Negash, S., Ryan, T. and Igbaria, M., *Quality and effectiveness in Web-based customer support systems, Information & Management, Volume 40*, 2003, pp.757-768.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Press, 2021, pp.8-10.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998, pp.151-208.

3. 기타

<http://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2/23> (검색일 : 2021. 7. 5.)

<http://www.m.pressian.com/m/pages/articles/177790#ODKW> (검색일 : 2021. 7. 5.)

<http://www.m.yna.co.kr/view/AKR20210628022700504?section> (검색일 : 2021. 7. 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7525.html#cb> (검색일 : 2021. 7. 8.)

<http://www.m.sedaily.com/m/pages/articles/011/0011790> (검색일 : 2021. 8. 5.)

Abstract

A Study on direction of the Naval Tactical Air Control development.

SHIN, Hyun Young

KIM, Byung Tech

The rapid changes i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nd security threats from neighboring power nations make the arms races intensifying among the power n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are present threats, and we must thoroughly prepare for traditional threats and respond to security threats from neighboring powers. To achieve its power advantage over North Korea's threats and exert deterrence against neighboring powers,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is planning to acquire an aircraft carrier.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ircraft carrier, systematic airspace control capabilities of maritime environment are required to make the most out of the naval air power including onboard fighter jets.

To pursue the Naval Tactical Air Control(NTAC) capacity for not only future aircraft carrier air operations but also current Dokdo class landing ship's amphibious operations, this study focused on suggesting a direction of the Naval Air Control capability development. Firstly current NTAC capability was analyzed to provide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usage aspect of the NTAC development. Through SWOT analysis of competency level and capability of the NTAC, a direc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NTAC with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as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a driving force of the enhancement of the NTAC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tilized.

The direction for the NTAC development was presented with organizational plans,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aviators' education & training for the unit combat readine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TAC was concluded with positive aspect of the NTAC capability enhancement from naval aviators' willingness to support the development for the NTAC system, and policy support from higher authorities including Naval Headquarters' leadership.

Key Words: Tactical Air Control, Maritime Air Operation, Amphibious Oper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본 국가안보 위기시의 군 위기 커뮤니케이션

윤원식*

- I. 서론
- II. 국가안보 위기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 III.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특징
- IV. ‘천안함·연평도 사건’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석
- V. 결론

* (예)육군 대령, (재)글로벌스마트융합센터장, 국제정치학 박사, e-mail: ywshik@daum.net

논문요약

국가안보 위기 사태는 군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대상이자 언론 및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 사안이다. 국가안보 위기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 군의 정보공개 및 취재지원 면에서 발생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군과 언론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겪는 핵심 의제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최근의 국가안보 위기 사태로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¹⁾을 들 수 있다.

국가안보 위기시 군은 위기관리 및 조치를 위한 대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언론을 통한 공중과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것은 군사적 조치 및 작전 못지않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브리핑과 정보공개,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과 통제대책 강구 등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Coombs나 Benoit의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이론에 근거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 발생 1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 사례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써, 차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군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제도적인 정비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주제어: 국가안보, 위기관리, 위기 커뮤니케이션

1) 이 명칭은 사건 발생 후 10여 년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명명되었으나, 국방부는 2021년 3월 31일부로 전사자 유족 및 해병대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평도 포격전’으로 개칭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국방부 공식 명칭인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시한다.

I. 서론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지 11년이 되었다. 이 두 사건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발생한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국가안보 위기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사태는 군과 언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기 커뮤니케이션²⁾(crisis communication) 사안이다.

위기는 체계의 일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과거에 발생했던 위기에 대한 학습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 동일 유형의 위기가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위기이든 위기관리와 대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³⁾

국가안보 위기시 군은 전반적인 위기관리 차원의 대내 커뮤니케이션 및 언론을 통한 일반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브리핑과 정보공개,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과 통제대책 강구 등 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와 신뢰 회복 차원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앞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유사한 국가안보 위기 사태 시에 대언론 관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위기관리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 및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은 경영학에서 시작된 위기관리 이론이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접합되어 발전된 이론으로서, 1990년대 이후 특히 PR커뮤니케이션 이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이다.

김영욱, 『PR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62.

3) 정찬권, 『국가위기관리론』 (서울: 대왕사, 2012), pp. 37-38.

II. 국가안보 위기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1. 위기의 정의와 유형

위기((危機, crisis)는 국어사전에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한자(漢字)로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합성어이다. 위기는 다루는 분야나 범위에 따라 조직위기, 국가위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학문의 영역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의미상으로 ‘위험’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과 결부되지 않은 위험인자의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의미하며, ‘위기’는 조직과 결부되어 실질적인 책임성을 논의하는 주체가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구분하기도 한다.⁵⁾

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김영옥(2008)은 개인에 대한 인식 차원을 ‘위험’으로, 조직 차원의 행위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을 ‘위기’로 보면서, 위기는 조직이 평소에 해 오던 일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조직의 안정적인 미래 활동을 어렵게 하며, 조직과 관련된 주요한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 여기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회적인 명성과 이미지의 훼손 등 공중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포함한다고 하였다.⁷⁾

이재은(2012)은 위기를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실수나 고의,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회체계의 범위가 지역사회 이상이면서 체계의 존립이나 구성원간의 생명·건강·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하고, ‘위기’에 대한 용어를 비상사태(emergency), 재난(disaster, hazard), 위험(risk, danger), 위협(threat), 재앙(calamity, catastrophe), 우발상황(contingency),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⁸⁾

4) 민중서림,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10), p. 1950.

5) 김영옥,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서울: 이화여대출판사, 2008), p. 216.

6) 김영옥(2008), p. 221.

7) 김영옥(2002), p. 66.

한용섭(2012)은 “위기는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로 반응할 시간이 짧은 가운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 긴장, 공포, 경악 등을 유발시키는 상황이나 사태, 중대한 목표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지를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국제적 혹은 국내적 환경의 변화, 고도의 불확실성으로 사태에 대한 전개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며, 대안이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결과에 대한 예측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태”⁹⁾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위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또는 기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 조직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떤 위협(threat)이나 위험(risk, danger), 우발상황(contingency)으로 인해 조직의 물질적·정신적 손실이나 또는 조직의 핵심적 가치나 이미지에 대한 손상, 또는 조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비상사태(emergency)나 사건(incident)’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위기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Pauchant와 Mitroff(1992)는 위기를 시스템 단계와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¹⁰⁾ 즉 시스템 단계가 물질적이냐 상징적이냐, 시스템 영역이 조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전체적으로 미치냐에 따라 <표 1>과 같이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 갈등(conflict), 위기(crisis)로 구분하였다. 사건은 부분 조직에 물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사고는 전체 조직에 물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갈등은 부분 조직에 상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위기는 전체 조직에 상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여기서 상징적이라는 것은 평소 조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정이나 신념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8) 이재은,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2012), p. 98.

9) 한용섭,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2), p. 182.

10) Pauchant, T. C. & Mitroff, I. I, *Transforming the crisis prone organization: Preventing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tragedi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2).: 김영욱, 『위기관리의 이해』 (서울: 책과 길, 2002), p. 6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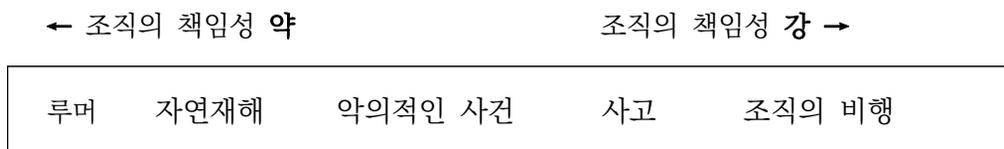
〈표 1〉 Pauchant와 Mitroff의 위기와 관련한 네 가지 유형

구 분		시스템 단계	
		물질적	상징적
시스템 영역	부분 조직	사건 incident	갈등 conflict
	전체 조직	사고 accident	위기 crisis

출처: 김영옥(2002),『위기관리의 이해』, p. 65에서 재인용

또한 Coombs는 위기의 유형을 다시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의 정도(perceptions of responsibility)에 따라 루머, 자연재해, 악의적인 사고, 사건, 조직의 비행 등 다섯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이 가장 높은 위기의 유형은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의 비행이며, 루머가 조직의 책임성이 가장 낮은 위기 유형이다.

〈표 2〉 Coombs의 위기 유형과 책임성 정도



Coombs(2007)는 이렇게 위기 유형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책임 정도를 연결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으로 발전시켰다.¹¹⁾ 이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Benoit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 조직 차원의 이미지 회복 전략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11) 김영옥, PR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 62.

2. 국가안보 위기와 위기관리

위기관리(危機管理, crisis management)는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쟁점관리(issue management) 등의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 위기관리는 이들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직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Fearn-Banks(1996)의 정의에 따르면 위기관리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의 위험성과 불안요인을 감소하고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말한다. 즉 조직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²⁾ 위기를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주로 보고 있는 Coombs(1999)는 위기관리를 다양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위기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피하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³⁾

Coombs(1999)는 위기관리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위기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활동으로서 위기관리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위기관리의 초기대응 형식 또는 원칙으로 신속성, 일관성, 개방성, 공감성(희생자에 대한 동정, 관심)을 들고 있다.¹⁴⁾ 특히 위기 발생 초기의 신속성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공백을 막아줄 수 있으므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최초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위기에 대한 정보가 빨리 제공되지 않으면 미디어나 스테이크 홀더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나 사실이 아닌 루머나 추측 등으로 정보공백을 메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조직의 신속한 대응은 곧 조직의 전문성으로 보고 있다.

일관성은 조직의 공식적인 대변인을 통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신뢰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개방성은 미디어의 이용 가능성과 정보의 공개성, 정직성을 의미한다.

12) 김영옥(2002), p. 86

13) W. T. Coombs,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Sage Publications, Inc, 1999): 이현우 역,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 17.

14) Timothy. Coombs(1999), 이현우 역(2001), p. 188.

여기서 미디어의 이용 가능성은 조직의 대변인이 미디어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을 하고, 만일 바로 답변을 주지 못할 때는 해당 정보가 확인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공개성은 항상 완전한 공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정보의 공개가 위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보의 공개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다. 스테이크 홀더들은 조직이 위기를 맞았다는 것보다도 조직이 위기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더 분노하게 되므로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기만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자가 발생한 위기에서는 최초 대응에서부터 반드시 희생자 대한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희생자에 대한 공감과 관심은 조직의 책임성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¹⁵⁾

〈표 3〉 Coombs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대응 원칙

구 분	정의 및 기대 효과
신속성	위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정보공백 방지. 조직의 전문성 알 수 있음
일관성	공식 대변인 지정, 일관된 메시지 제공. 조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개방성	미디어의 이용 가능성, 정보의 공개성, 정직성. 정직성이 가장 중요
공감성	희생자(부상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 동정. 조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김영옥은 위기관리는 위기가 일어난 그 순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가 일어나기 전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위기를 준비하는 것과, 위기상황이 종결되고 나서 위기를 평가하고 다른 위기 상황을 위해 조직의 대응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기관리는 조직문화, 조직구조 등과도 연결되어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직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¹⁶⁾ 또 위기를

15) Timothy. Coombs(1999), 이현우 역(2001), pp. 189-196에서 재정리.

16) 김영옥(2002), pp. 86-87.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주체가 되는 조직이 다른 조직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관련 공중과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¹⁷⁾ 이러한 점에서 사회 갈등 현상이나 위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직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사회나 조직 간의 갈등해소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재은은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을 크게 예방전략(anticipation)과 복원전략(resilience)으로 구분하고, 예방전략은 잠재적 또는 가상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복원전략은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단계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분야가 대국민 또는 대언론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즉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이라고 보고 있다.¹⁸⁾ 즉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통해서 위기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의 참여와 이해, 상호 협력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므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위기와 관련하여 조직이 효율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¹⁹⁾ 또 안철현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존립, 이미지, 신뢰, 평판, 명성, 목표 및 전략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공중들과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관계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위기를 예방, 대비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제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보았다.²⁰⁾

한편 위기관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군 합동참모본부는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그 위기 상황을 계속 통제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제도적 장치 및 절차”²¹⁾로

17) 김영옥(2008), p. 320.

18) 이재은(2012), pp. 126-127.

19) 이재은(2012), p. 318.

20) 안철현,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학문사, 2003), p. 40.

정의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위기관리는 어떠한 위기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응, 복구하여 피해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위협 요소가 더 중요한지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협’은 그 정도와 시기에 따라 곧바로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대내외적인 위협이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협은 적시에 관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 위기’를 국가 위기의 유형 중에서 전통적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보고, ‘적대국이나 외부세력이 평시에 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 또는 침투함에 따라 우리 영토, 국민과 군대, 소유권 혹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한다.

Ⅲ.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특징

1.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구분해서 쓰이기도 한다. 이를 구분한다면 위기의 단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즉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에서 Coombs(1999)나 김영옥(2003)의 연구와 같이 거시적·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위기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으로, 반면에 Benoit(1995)나 Coombs(1998)의 연구와 같이 특정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미시적·부분적 쟁점 관리(issue management) 차원에서 당면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위기 커뮤니케

21) 합동참모본부(2010), p. 244.

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²⁾

특히 Coombs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위기관리의 전 과정에서 단순히 사과문 발표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하며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²³⁾ 또 Coombs는 위기의 억제와 회복 즉,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위기시에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태도도 취해야 하며, 위기회복을 위한 조직의 노력 등의 활동들은 모두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위기시에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회복 내지는 극복하기 위한 언어적(verbal) · 비언어적(non-verbal)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 이때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영역은 사고 발생 전후를 통하여 행해진 위기나 재난극복의 전 과정이며, 조직이 위기 해결을 위한 계획과 사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기술을 개발하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보기도 한다.²⁵⁾

김영옥은 위험이 조직과 결부되어 현재화하면서 위기로 발전하고, 위기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갈등과 결부되므로, 위험, 위기, 갈등은 서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위험 사안에 대해서 주체로 등장하는 조직이 공중에게 수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조직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조직을 상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된다.²⁶⁾ 따라서 위기 커

22) 안철현, “공공기관의 PR특성과 위기관리 현황연구: 우수성 연구의 적용”,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 32

23) 안철현(2008), p. 34.

24) Timothy. Coombs(1999), 이현우 역,(2001), p. 186.

25) 이 연(2003), p. 43.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이 함께 도입되어야 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소(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에 위기관리의 주체인 군이 위기 대응과 공보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언론 공보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내부의 대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물론, 공중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군의 이미지 회복과 언론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이루어지는 조직 외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행위 전반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즉 위기가 발생한 당시의 위기 대응과 조치과정은 물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2.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과 유형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모델 중의 하나가 Benoit의 이미지 회복 전략 이론이다. Benoit(1995)는 조직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언어와 행동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기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고,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격이나 비난, 불만으로 인한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면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으로 보고 있다.²⁸⁾ 이런 의미에서 Benoit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곧 ‘이미지 회복 전략’ (image restoration strategies)이라 하고, 이미지 회복전략의 유형을 부인(denial), 책임 회피(evading responsibility), 사건충격 최소화(reducing offensiveness of event), 개선행위(correction action), 사과(mortification)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14가지의 이미지 회복 전략으로 제시하였다.²⁹⁾

26) 김영옥(2013), p. 217.

27) 김영옥(2013), p. 218.

28) 김영옥(2008), p. 327.

29) Benoit, W. L. *Accounts, Excuses, and Apologies: A theory of Image Restoration Strategi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a): 김영옥(2002), p. 260

Coombs는 이미지 회복전략을 조직차원의 위기관리에 적용하여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비난자 공격(attack the accuser), 부인(denial), 변명(excuse), 합리화(justification), 환심사기(ingratiation),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 사과(full apology)전략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oombs는 이러한 7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조직이 책임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수용전략과 방어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방어전략은 위기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노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어전략의 핵심은 희생자를 외면하면서 까지 조직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수용전략은 위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의 노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용전략의 핵심은 조직의 명성 또는 재정적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희생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³⁰⁾

Coombs는 위기의 유형을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소문, 자연재해, 악의적인 사건, 사고, 조직의 비행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이것을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7가지 이미지 회복 전략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 4〉 Coombs의 위기 유형과 이미지 회복 전략 유형과의 관계

조직의 책임성	← 약					강 →				
위기유형	소문	자연재해	악의적인 사건	사고	조직의 비행					
전략유형	비난자 공격 - 부인 - 변명 - 정당화 - 환심사기 - 개선행위 - 사과									
수용정도	← 방어적 전략					수용적 전략 →				

출처: 김영욱(2002),『위기관리의 이해』, p. 265.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루머나 자연재해와 같은 조직의 책임성이 적은 위기에 대해서는 조직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방어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유용하고, 반면에 조직의 비행이나 사고와 같은 위기는 조직의 책임성이 크므로 수용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에서 재인용함.

30) Timothy. Coombs(1999), 이현우 역(2001), pp. 202-203.

IV.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1. ‘천안함 피격 사건’

1) 사건 개요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천안함(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다.³¹⁾ 당시 해군 천안함(PCC-772, 1200톤급)은 사상 초유의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함체는 폭발과 동시에 함수와 함미가 두 동강으로 분리 절단되어 침몰됨으로써 실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다.³²⁾

2)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과정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에서부터 정리 단계까지 약 4개월(2010.3.26.~2010.7.31.) 동안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보고서³³⁾에 의하면, 국내 언론의 보도 기사 건수는 총 15,438개 (신문 13,384개, 방송 2,054개)에 이른다.

군은 최초 사건 발생 후 YTN이 속보를 보도(22시 24분)한 이후부터 언론에 대한 공보대응에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언론의 빗발치는 문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31)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2011), p. 12.

32) 천안함은 피격 20분 만에 배의 절반 이상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승조원들은 다급하게 탈출을 시도했으나 배의 후미 쪽에서 근무하던 승조원들은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3월 27일 새벽 01시 37분경에 완전히 침몰되었다. 피격 후 해군 고속정 4척이 사고발생 30여분 만에 구조를 위해 출동하였으나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해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 70여분에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함께 구조 활동을 펼쳤다.

33) 국방부 내부자료, 『천안함 피격사건 언론보도 분석: 최종 보고서』 (2010. 9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천안함 사건관련 언론보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분석하였음. 분석 대상은, 중앙일간지 10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와 방송 4개사(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YTN 9시 뉴스)임

군의 언론에 대한 최초 공개는 사건발생 두 시간 정도가 경과한 3월 26일 23시 30분에 1차 보도자료³⁴⁾를 배포하였고, 이어서 3월 27일 00시 15분에 2차 보도자료³⁵⁾를 냈다. 기자들의 궁금증과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다시 00시 23분에 합동참모본부 소속의 해군 준장이 국방부 출입기자실에서 “파공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침몰 위치는 백령도 서남쪽 1마일 정도 해상이며 현재 거의 침몰상태에 있고,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고 구조하고 있다.”는 요지로 최초 브리핑을 하였다.

군은 사건 발생 후 최초에는 국방부 홍보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주관으로 언론 브리핑 및 공보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3월 28일부터는 국방부 대변인이 주관하여 브리핑 및 언론 대응 관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갔다. 초기 1주일간인 4월 4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5시에 1일 2회 정기 브리핑을 하였다. 2주차인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오전에는 국방부 기자실에서 카메라 취재는 하지 않는 질의응답식의 비공식 브리핑을 하고, 오후에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정기 브리핑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5월 20일까지 기간 중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공식브리핑 약 50여회와 수시 브리핑 50여회 등 총 100여회의 브리핑을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주요 이슈가 계속되던 4월 25일 까지 국방부 기자실에서 수시 브리핑 30여회를 추가로 하였다. 브리핑은 국방부 대변인과 공보과장(부대변인 겸임)을 비롯한 합참과 해군 공보장교가 63여회,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3회와 기자 간담회 2회, 합참의장 기자 간담회 1회를 비롯하여 주요 직위자가 29여회, 민군합동조사단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8회를 브리핑하였다. 브리핑 이외에 별도로 언론에 대해 약 5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³⁶⁾

34) 1차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45분경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아 함정의 선저가 원인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 중에 있어 인원 구조중임”

35) 2차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인원 58명, 아 초계함가 경비정이 구조 작업 실시 중. 초계함 레이더상에 미상 물체가 포착되어 5분간 경고사격, 새때로 추정”

36)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공보조치 사례집』 (국방부, 2010), pp. 52-55.에서 발췌함.

3)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과정 분석 및 평가

천안함 피격사건은 Coombs & Holladay의 위기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해 구분해 보면, 위기의 통제 가능성 면에서 북한의 수중공격에 의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군의 통제가 어려웠고, 사건의 원인이 외부의 적대세력인 북한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Coombs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외부의 적대세력인 북한에 의한 위기이기에 '악의적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유형은 Coombs의 책임성 정도에 대입해보면 조직의 책임성이 높지 않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위기이다. 따라서 Coombs나 Benoit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면에서 보면 '부인'이나 '변명', '정당화'와 같은 방어적인 전략의 사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위기에 속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군과 언론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나 재난 사태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즉 언론은 사실 보도, 객관 보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도보다는 선정적인 보도, 감성적인 보도, 폭로성 보도,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고,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낳게 하는 보도가 많았다.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건을 보는 관점이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보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소행과 그에 따른 책임성 여부에 대한 보도를 놓고 진보성향의 매체와 보수성향의 매체가 서로 상반된 보도 프레이밍(framing)이 설정됨으로 인해,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언론마저 사실에 대한 근거 없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추측성 보도를 양산하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³⁷⁾는 점은 되짚어 볼 요소가 많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 여론의 분열, 그리고 군과 언론 간 또는 언론 상호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 되었다. 심지어 “객관적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구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토대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근거 없는 주

37) 김재범, “천안함 사태 언론보도 진단과 개선방안”,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2010.5.26.), p. 1.

장을 여과 없이 흥미 위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결부된 사안에 대해 선정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추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³⁸⁾고 보는 관점도 있다.

또한 “사안의 엄중함 등을 고려할 때, 군 당국자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이기보다는 검증되지 않거나, 과거 경험에 근거한 조각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측면은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³⁹⁾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초기에 실종자 탐색구조와 선체 발견, 사고원인 규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와 위기관리 측면에서 혼란이 있었다. 즉 언론에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가 필요한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한 기준과 전략이 분명하지 않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공보판단이 늦었다.

한편으로 언론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한 궁금증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도 군은 관련 정보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고, 또 사건과 관련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함으로써 인해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언론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와 비판 여론에 밀려 불가피하게 군은 수세적인 공보 대응을 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세 차례의 수정발표⁴⁰⁾와 백령도 해안 초소에서 촬영된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열영상 관측장비)의 동영상 녹화 기록물에 대한 축차적 공개⁴¹⁾를 들 수 있다.

38) 김재범(2010.5.26.), p. 2.

39) 김재범(2010.5.26.), p. 6.

40) 군은 최초에는 사건 발생 시각이 21시 45분이라고 발표(3월 27일)했지만, 다시 21시 30분으로 수정 발표(3월 28일)하고, 다시 국회 보고에서 21시 25분으로(3월 29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4월 1일)에서 21시 22분로 최종 수정했다.

41) 군은 최초 2010년 3월 30일에 40초짜리 영상을, 이어 4월 1일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4월 7일에는 3시간 10분 분량의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TOD 영상 공개를 둘러싼 언론과 군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다. 3.27(토)오후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 해병 6여단을 방문한 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TOD영상을 보니 처음부터 함미와 함수가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은 당면한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주도적 메시지 차원의 공보 대응이 아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 위주의 정보공개와 브리핑이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즉 천안함 피격사건은 군의 대 언론 위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군 내부적인 대내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공중과 언론과의 관계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 양면에서 모두 문제점이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보안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상호 간의 불신이라는 교훈과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군은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이에 대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수세적 브리핑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공보대응의 미흡,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놓침으로 인해 위기사 커뮤니케이션 대응의 원칙인 신속성과 개방성 면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언론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추측 보도의 빌미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군은 국민의 기대치와 언론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정보공개와 수세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인해 군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리되었더라”고 언급함으로써 언론이 인지하게 되었다. 그 후 3.30(화)에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TOD영상이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기자들이 영상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최초 국방부는“TOD영상은 적 침투 및 감시를 위한 첩보수집자산 으로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영상을 공개시 수집자산의 수준이 노출될 우려 가 있어 공개가 곤란하다”고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기자들의 요구로 국방부는 3.30일 오후에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분리되기 전후의 장면 위주의 80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1차 공개하였다. 다음날인 4.1(목)자 언론 보도는 ‘영상자료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기 때문 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음에 따라, 4.1일 오후에 다시 기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40분 분량의 영상을 2차로 공개하였다. 그 후 4.7(수)국군수도병원에서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시 TOD의 영상자료가 이미 공개한 수동녹화영상 말고도 TOD 서버에 ‘자동녹화기능’(DVR)이 있다는 사실을 TOD제작사의 전문가를 통해 뒤늦게 알고 최종적으로 3시간 10분 분량의 영상을 3차로 공개하였다.

한편 3차 영상 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5.28일에 ‘민중의 소리’는 합동조사단에서 국회 천안함 특위에 보고한 TOD 영상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알고,“국방부가 없던 TOD영상 결국 있었다”며 뒤늦은 보도를 한데 대해, 국방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4월 7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한 자료”임을 바로잡았다. 출처: 국방부(2010), 『천안함 피격사건 공보조치 사례집』 p.161.

2. '연평도 포격전'

1) 사건 개요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연평도에 위치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가 연평도 공해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에 북한군이 연평도 북방에 있는 해안포 기지에서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 발을 해병대 연평부대 주둔지와 연평도 민간시설에 포격을 가해온 사건이다.⁴²⁾ 북한군의 기습적인 해안포 공격을 받은 해병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80여 발의 대응 포격을 하였고, 이러한 남북한 간의 포격전은 오후 3시 41분까지 1시간 7분 동안 각각 두 차례씩 있었다. 이 포격전으로 인해 한국 해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 당했으며, 연평도 주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연평도 주민 가옥 118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과정

사태 발생 초기인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국방부에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 연평도 현지에 200여 명, 국군수도병원에 6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경쟁적으로 취재·보도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4일 동안에는 국방부에 40여 명, 연평도에 70여 명 (방송 6개 매체 29명, 신문·통신·외신 23개 매체 41명)의 기자가 취재하였다. 보도 건수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1주일간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보도 건수만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총 574건 (KBS 231건, MBC 192건, SBS 151건)으로서 1일 평균 82건을 보도한 셈이다.⁴³⁾ 이는 평소 지상파 방송사가 하루에 26건 정도 보도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건수이다.

국방부와 연평도 현장에서 언론의 취재 경쟁이 치열했고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에 대해서 사태 발생 초기 1주일간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사는 각각 행정선이나 화물선을 타고 연평도에 취재진을 들여보냈고, 군

42) 대한민국 정부, 『2010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0), P. 266.

43) 이동훈(2010), p. 8.

은 이를 막고자 하였으나 언론의 취재 의욕과 기민함이 군의 통제보다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군은 국방부에서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작전 진행 사항과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평도에는 연평면사무소에 '현장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하여 현장 취재와 관련된 방침이나 통제 등 유의사항에 대한 협조와 현장 조치를 하였다.

군은 11월 23일 오후 4시에 '진도개 1'을 발령하여 경계 태세⁴⁴⁾를 1급으로 강화했고, 인천시에서는 11월 23일 오후 5시 20분에 용진군 연평면 일대에 '통합방위 을중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용진군수가 연평도 전역을 '통제구역'⁴⁵⁾으로 설정한 것은 11월 29일 12시로서, 최초 사태 발생으로부터 무려 6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사태 발생 6일 만에 군은 정식으로 연평도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통제구역을 공지하고 자발적인 철수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군은 '통합방위법'을 적용하여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고자 했으나 당시 상황과 여건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였다. 통합방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나 또는 통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수많은 국내외 신문·방송·통신 매체들이 연평도에서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군과 언론 사이에 또 다른 충돌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통제구역 설정 및 선포를 통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도 군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기보다는 국가안보 위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보조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 강제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다.

44) 군의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 규모 또는 침투가 예상되는 정도에 따라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도개 1'(경계태세 1급) '진도개 2'(경계태세 2급) '진도개 3'(경계태세 3급)으로 구분한다.

45) 통제구역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거나 경계태세 1급이 선포된 경우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하는 것으로 '작전과 관련이 없는 주민이나 기자 등의 출입금지나 퇴거를 명할 수 있는 조치이다. 당시 연평도 전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11월 28일 12시경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건의를 받은 인천광역시장이 용진군수에게 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용진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평면(연평도는 행정구역상 용진군 연평면에 해당한다) 전 지역에 선포되었다.

3)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석 및 평가

‘연평도 포격전’은 Coombs & Holladay의 위기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해 구분해 보면, 위기의 통제 가능성 면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포격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군의 통제 가능성 면에서 비의도적이고, 사건의 원인이 외부의 적대 세력인 북한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Coombs의 위기 분류 기준에 의하면 외부의 적대세력인 북한에 의해 발생한 위기이기에 ‘악의적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유형은 Coombs가 분류한 책임성 정도에 비춰보면 조직의 책임성이 높지 않은 위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oombs나 Benoit가 분류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이미지 회복 전략 면에서 보면 ‘부인’이나 ‘변명’ ‘정당화’와 같은 방어적인 전략의 사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위기이다.

군과 언론 간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천안함 피격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사건 발생 초기 군은 연평도 일대의 취재진에 대해서 질서있는 통제나 취재 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이후에 웅진군에서 연평도 일대에 통제구역을 선포하여 작전의 용이성과 군사보안에 대해 유의하도록 하는 외부적인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언론에 대한 취재통제와 지원 대책은 여전히 다를 바 없었다. 군은 연평도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채널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군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급히 연평도로 증원된 공보장교 몇 명이 취재 기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식별표지를 배부하며 집계하는 수준으로 미흡했다.

한편 웅진군수의 통제구역 선포 이후에도 군은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북한군의 추가 포격의 위험이 있는 좁은 지역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취재진들을 안전 차원에서 철수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연평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이런 초유의 국가안보 위기 사태에 대해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군에서 분명한 언론통제 및 지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연평도에서 공동취재단 구성은 방송 기자들이 자체 협의를 통해 구성하고, 그 외 매체들은 각기 다른 여러 형태의 신문(중앙지, 지방지), 통신, 인터넷 매체가 개별적으로 취재 및 보도 경쟁을 하느라 자체 협의가 되지 않았

다. 더구나 위기관리와 언론과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주체인 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정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언론 입장에서는 뉴스 가치가 매우 높은 빅 이슈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국가안보 위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언론은 군의 통제와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했지만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실제 행동으로는 이행되지 못했다. 언론은 군의 통제와 협조 요청 및 취재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야간이나 새벽 등 심야시간에 잠복해서 또는 군의 통제범위 밖에서 배치된 무기나 장비, 진지, 초소 동향 등을 보도하여 군과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군이 언론과의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미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V. 결 론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은 6.25 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발생한 근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안보 위기 사태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구현을 위한 역할과 기능, 보도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군사작전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전현장에서의 취재와 보도, 군사작전을 취재하는 기자 개인의 안전 문제, 타 언론사와의 속보 경쟁에 대한 강박관념과 부담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당면한 안보 위기를 관리해야하는 역할과 책임이 급선무인 가운데, 군사작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보공개와 언론취재 및 보도를 위한 공보대응 조치에 대해 많은 압박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은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군에 대한 이미지와 명성, 신뢰 면에서 사건 그 자체로 인한 안보 위기 이외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위기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반의 위기관리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군과 언론 간에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안보 환경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언론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군과 언론이 국가안보 위기 사태 발생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협의기구나 제도적인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이러한 면에서 잘 정비된 기구와 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1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유형의 국가안보 위기 사태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발전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군과 언론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점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논문투고일 : 2021.06.01]

[논문심사일 : 2021.06.15]

[논문수정일 : 2021.06.30]

[게재확정일 : 2021.09.13]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김영옥,『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서울: 이화여대출판사, 2008.
- 김영옥,『위기관리의 이해: 공중관계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책과 길, 2002.
- 김영옥,『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김태현 외,“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의 역할”,「안보현안분석」(국방대 국가안전보장연구소, Vol.167, 2020.5.31)
- 국방대학교,『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 2012.
- 안철현,『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학문사, 2003.
- 이동훈,『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집문당, 1999.
- 이 연,『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학문사, 2003.
- 이재은,『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2012.
- 이현우 역,『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정찬권,『국가위기관리론』, 서울: 대왕사, 2010.
- 차희원,“위기유형과 관계관리에 따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홍보학 연구』제8권 2호, (한국PR학회, 2002).
- 합동참모본부,『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안철현, “공공기관의 PR 특성과 위기관리 현황 연구: 우수성 연구의 적용”,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형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류지연, “조직의 위기이력 유형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문미란, “한국 외교안보 부처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구조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여론 동향” 현안 조사 분석 리포트 10-07, 2010.11.30.
- 이현우·최윤형, “위기관리에서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전개 과정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홍보학 연구』제18권 1호, (한국PR학회, 2014)
- 이동훈, “북한 연평도 도발 사건과 관련한 방송 3사 보도 태도 분석”, 자유기업원. 2010.12.16.
- 박은혜·김영옥, “언론 프레임과 이미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제38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 방송기자연합회, “긴급 진단 - 연평도 도발과 전쟁 저널리즘” , 『방송기자』2010년 송년호, (방송기자연합회, 2010)

2. 외국 문헌 및 기타

- Fearn-Banks, K, *Crisis Communication: A casebook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1996. 최양호·이명천 역, 『위기관리 PR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Coombs, W. T,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 Sage Publications, Inc, 1999. 이현우 역,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2004. 7.12)
- 『천안함 피격사건 공보조치 사례집』국방부 자료, 2010.
- 『천안함 피격사건 언론보도 분석 최종보고서』국방부 자료, 2010.

Abstract

A Review of Military Crisis Communication Cases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Yoon, Won Shik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is a key crisis management target for the military and the most important crisis communication issue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media and the people.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is an issue that suffers from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media regardless of when and where it occurs in terms of media coverage and coverag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Among the most recent national security crisis caused by military provocations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are the ROKS Cheonan(PCC-772) attack on March 26, 2010 and the Yeonpeong Island shelling attack on November 23.

In the event of a national security crisis, the military will focus its capabilities on internal communication for crisis management and action, as well as crisis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hrough the media externally. This is because brief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support for coverage and control of the media are as important as military measures and operations.

Based on Coombs or Benoit's theory of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SCCT), this paper analyzes three crisis cases caused by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to help the military communicate crisis management in the event of future similar cases.

key words: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Crisis Communication

저자소개(가나다순)

▶ 김기호(金起豪)

국가안보전략과 통일을 연구하는 “돌하나연구소” 소장으로서 탈북 국군포로 유자녀와 고아들을 안보와 통일의 리더로 키우는 일에 제1막 군인-제2막 교수에 이어 제3막 인생의 나래를 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부터 통일전략기획을 꿈꾸어 왔으며, 33년의 군생활 중 1/3을 학교에 학생 및 교수(관)로 근무하여 국가안보와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다 체득했다.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순환직 교수로 근무하다가 전역과 동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10년간 안보·군사·북한문제를 강의하면서 방송에 전문가 패널 및 월간지와 일간지의 칼럼니스트 등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현대북한이해 1,2,3,4판(2016~2021)』, 『나를 바꾸는 리더십(2019)』, 『영화로 본 리더십(2018)』, 『북한군사론(2010)』 등이 있다.

▶ 김병택

해군대령으로서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산업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에서 정책분야의 실무자와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합동교리처장 겸 교리연구원으로서 군 최상위 교범인 군사기본교리 연구 및 합동교범 발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자원관리, 승무계획 알고리즘개발, 해군력 발전방향 등 10여편의 논문 발표 및 게재와 합동교범 합동인사 등을 발간하였다.

▶ 문근형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 석사학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논문은 “탈냉전이후 중국의 동북아 대외정책 연구”, 박사논문은 “국제군인스포츠 위원회(CISM) 활동과 군사적 역할 분석”이다. 재향군인회 학술지 제1호에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연

구”, 제2호에 “북한 정세 급변시 주변국 개입가능성 연구”, 3호에 “한국 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경과 소고”, 4호에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가치 고찰”, 5호에 “보훈정책 발전을 위한 재향군인회 역할과 발전 방안 연구”를 기고하였다.

▶ 박상중

현재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로 국가안보, 정책전략, 국방개혁, 국방우주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천대학교에서 국방외교, 협력안보, 리더십개발, 조직관리, 전장리더십, 지상작전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등재학술지 우수논문상을 6회와 '2020년 참 국방대인상(지성 부문)'을 수상하였다.

▶ 신현영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해군 P-3 교관조종사로서 약 3,000시간의 해상비행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비행대대장, 비행전대장으로 작전비행부대를 지휘하였다.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에서 교육 훈련 및 항공관련 실무자와 과장을 역임 후, 2018년 9월 해군대령으로 예편하였다. 현재는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 연구분야는 비전통위협 및 우주항공관련 안보 분야이다.

▶ 윤원식

국방부·합참에서 언론 공보 관련 실무자와 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재)GSCC센터장 및 Y미디어&컨설팅에서 4차산업혁명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국가안보 위기시 군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연구윤리규정

□ 목적

향균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적용대상

향균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

□ 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균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부정행위 방지목적

이 규정은 향균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 원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음.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함.
-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적용.

□ 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

□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함.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됨.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재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본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학술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편집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재심위원회 구성

-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과 동일함.
- 재심위원은 최초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인원이어야 함.

□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공지의무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윤리소위는 이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함.

논문투고 및 심사/집필요령

□ 논문심사

1. 심사절차

- 가.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접수(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 활용
- 나. 논문 심사(3인) 의뢰 / 심사(2주)
 - * 제목 또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 다.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판정
- 라. 심사결과 투고자 통보
- 바. 수정논문은 1주 이내에 수정 제출 / 접수

2. 심사기준

- 가. 내용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가 ① 외교 ② 국방 및 안보 ③ 통일정책 ④
향군 제도개선 분야 등에 관련된 주제
- 나. 내용의 창의성 :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
- 다. 전개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
- 라. 향군 발전 및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향군의 제도개선 등에 기
여하거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
어야 함
- 마. 형식의 적절성 : 논문양식을 준수
- 바.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방법, 연
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논문투고

1. 논문 투고자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한다. 단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원고집필요령'을 따라야 하며, 논문주제는 외교, 국방/안보, 통일정책, 향군 제도개선 분야로 한정한다.
3.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연구원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논문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6. 투고 논문은 연구원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7.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연구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학술지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예정일은 4월 8일과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로 하며 논문접수 마감일은 발행일 45일 전까지인 2월 25일과 8월 25일까지 수시접수 한다.

□ 확정 및 인쇄

1.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저자 논문은 편집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2.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의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게재논문은 편집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약 20매)로 한다. 최대 150매(A4 약 25매)를 넘지 않는다.

2. 용지여백 기준

가. 용지여백(A4 기준)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6mm	46mm	42.5mm	42.5mm	12.5mm	12.5mm	0mm

나. 본문 서체 : 글꼴 : 신명조 / 글자크기 12point(대제목 14point진하게, 중제목 12point 진하게) / 장평 100% / 자간 0% / 본문 글자크기 10.5point, 줄간격 160% / 첫줄 들여쓰기 10point

다. 각주 서체 : 신명조 / 글자크기 9point

3.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 1)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등) : 이중꺼쇠 『 』로 표기하고,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 last name 순서로 표기하고,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가)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서울 : 법문사, 1985), p. 120.

나)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2.

- 다)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 2) 논문 :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9-33.
- 나)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7, No1(1965), p. 627.
- 3) 학위논문 : 한글 학위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 4)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 5)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 출판정보 등이 생략된 저자명을 표기한 후 인용페이지를 표기한다. 서양권 저자 이름은 last name만 표기한다. 바로 위의 인용한 자료를 잇달아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p. 2.’, ‘ibid., p. 2.’로 표기한다
- 가) 황병무(2011), p. 300.
- 나) Nye(2013), p. 27. ibid., p. 90.
- 6) 인터넷 자료 : 웹주소의 검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가) <http://www.technorealism.org>(검색일 : 2019.2.12)
- 나) 국방부(<http://www.MND.go.kr>), “국방의 현주소”(검색일 : 2019.2.12)
-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 가) 황병무,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00일보』, 2003. 4. 19.
- 나) “안보의 현주소” 『연합뉴스』, 2003. 4. 19.
-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한글문헌,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글 및 동

양문헌은 저자의 성을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저자의 성(참고문헌에는 last name을 맨앞에 표기하고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을 표기)를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이때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각주에서와는 달리 괄호 없이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4)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 수는 제외한다.

3. 기타 참고사항

- 가.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 나.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1985), pp.1-2.
- 다.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마. 논문 원고 순서는 ①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②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③ 원고지 5매 이내의 한글요약문과 3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④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게제시에는 별도로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투고 환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연간 2회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재향군인회와 안보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자료를 수록하기 위한 학술지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등재학술(후보)지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군 회원과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안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보내실 곳 :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 : 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02-499-02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